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3. 08
VOL. 681

무더운 여름,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온 만큼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때입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2023. August
Vol. 681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3년 8월 1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박장호 위원장(사무차장)

박태형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지은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성소미 위원(공보기획관)

김형진 간사(공보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한주연(보좌관), 윤희진(선임비서관), 이구형(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04 지금 국회에서는

-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열려
-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 김진표 국회의장, 투르크메니스탄·필리핀 실질협력 강화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 김영주 국회부의장,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 개최
- 정우택 국회부의장, 충북 수해현장 긴급복구작업 실시
- 국회사무처, 한국체육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23 특집 - 생성형 AI 관련 입법 동향과 과제

- 산업, 문화, 교육 등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과 우려 _정종기 한국인공지능인재개발원장
- 생성형 AI와 국회 차원의 대응 전략 _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 생성형 AI 관련 규제 및 해외 입법 동향 _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 국회의 입법 동향과 과제 _남은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32 위원장에게 듣는다 _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익 지켜낼 것”

34 의원의 좌우명 _윤두현 의원

‘치대국악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

36 칭찬합시다 _지성호 의원

이재정 의원이 지성호 의원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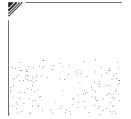
38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임오경 의원

‘핸드볼 영웅’에서 국민의 대표로

40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 등 주제로 토론회

CONTENTS



32



34



36



38

49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촛불맨드라미

50 함께하는 국회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52 법률, 시대를 읽다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기반 마련
_박재유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54 주재관 리포트
PMQs 방청을 통해 본 영국의 정치문화
_김경원 국회 영국 주재관

57 이달의 청원

58 위원회는 지금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실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방안 논의

63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

64 국회 뉴스

72 법 시행 그 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74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법률안 87건 의결

78 만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80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지구적 공급망의 재구성 _김동철 박사

82 국회 사람들
"국회의 모든 활동, 카메라에 담아 '역사'로 남기죠"
_임진완 공보기획관실 주무관

84 이달의 서평
에너지 세계사 _권승문 연구기획위원

86 고전에서 읽는 지혜
종신토록 읽어야 할 정약용의 '논어고금주'
_박석무 석좌교수

88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제헌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개원식 식순
_김경재 속기사무관

90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진안고원 마이산 _유인근 여행칼럼니스트

94 생활 속 우리말글
섬세한 동사 사용이 좋은 문장을 만든다 _김풍기 교수

96 정치 관련 주요 일지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열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정을 기념하고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7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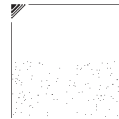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원 등이 참석했다. 본행사 전에는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헌정회장, 정당대표 등이 참석해 비공개 사전환담회를 가졌다.

이후 경축식은 ‘헌법, 희망을 열고 미래로’라는 슬로

건 아래, 오페라 ‘헌법으로 꿈꾸다’ 공연과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피아노 연주, 합창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에 수해 피해가 확산된 상황을 감안해 팡파르 등은 생략됐다.

감사패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제14·15·16·17·18대 국회의원)과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제10·12·13·14·15대 국회의원)에게 수여됐다.

이어 김예지 국회의원이 슈만-리스트의 ‘헌정’을 연주했고 합창단의 ‘함께 가자(March With Me)’ 합창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주제영상이 상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내빈들

영됐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제헌절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 등 담은 개헌안 총선 때 국민투표” 제안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통합을 이루어낸 1948년의 제헌정신을 이어받은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정치적인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이상 넘긴 만큼 최대한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 위해 선거제도 개편 신속히 마무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4일 국회 사랑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월 4일 국회 사랑채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 우리 국회는 퇴행적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다. 국회의원 144명이 정당을 초월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고 정치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19년 만에 전원위원

회를 열어 열띤 토론도 벌였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조사도 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승자독식’과 극한 대립의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폭넓은 공감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처럼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 협상을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나면 협상결과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 정치개혁과 입법역량 강화에 힘쓸 것

김 의장은 “앞으로 1년, ‘대화과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고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네 가지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김 의장은 “대화과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김 의장은 “국회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21대국회 들어 의원입법 비중이 97%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는 복잡한 정부 입법 추진과정을 생략하고, 손쉬운 의원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간 이견조정을 위한 협의와 재원 소요, 규제에 따른 영향 분석 등 충분한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발의되는 법안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법안 검토와 이해 조정의 부담이 전부 국회로 넘어오면서 법안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임위 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입법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갈등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국회가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조만간 국회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김 의장은 “의회외교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와 안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의회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미국을 방문해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워싱턴에 한미의원연맹 사무소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교민과 투자 기업들이 적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동맹 중심의 외교에 우선 집중하고 있는 정부 외교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의회 외교가 맡겠다”며 “특히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1월 말 2030세계박람회 개최 확정을 앞두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넷째, 김 의장은 “국민과 더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을 확대하고, 국회방송을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청원제도’를 활

성화하기 위해 ‘의원소개청원 전자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큰일을 할 때는 술단지를 부수고 배를 강물에 가라앉히는 마음으로, 돌아갈 길을 모두 끊고 결연히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파부침주(破釜沈舟)’라는 말이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다. 술단지를 부수고, 돌아갈 배를 강물 속에 가라앉히는 불퇴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Q. 제21대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이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은 임기 동안 여야 협치를 이끌어내실 복안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A. 제 나름대로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제21대국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소야대인데 역대 최대로 의석수 차이가 나는, 아주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역대 최소의 득표수 차이로 발족한 정부인데다 선거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한 대립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선거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선거 때마다 일종의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나기 때문에 각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여야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게 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반복해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여야 지도부와 더욱 대화와 소통을 촉구해서 가능하면 일방 통과가 없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이런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제도화하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지난 1년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는 그것을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Q.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여당에서는 서약도 받고 있고, 야당 혁신위에서는 특권을 내려놓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개헌 없이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데, 개헌 이전이라도 제도화할 방안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우리 헌법이 불체포특권을 헌법 조문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과거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으로나마 현행법 체계하에서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불체포특권을 폐지할) 방법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기국회는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경우에 휴회를 할 수 없지만 임시국회의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개헌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불체포특권 폐지를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더 개헌이 시급하



다고 생각합니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개헌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선거법 협상을 15일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여야 견해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여야 간 협상이 계속 진전이 안 되면 의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A. 지금 2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니가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그제 과연 되겠냐는 걱정을 하시는 질문 같은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여야 지도부도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동안 예년의 다른 선거법 개정 때와는 달리 지도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각 당 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협상은 각 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협상을 해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각 당이 어느 정도의 선거법 협상에 관한 입장을 정의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협상 과정을 통해서 결정지어가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에도 한 가지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과거의 선거법 협상 과정을 보면 각 당은 자기가 갈 길에 대해, 예를 들면 부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떤 때에는 대전까지만 가는 방안을 살짝 띄워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산을 넘어 후쿠오카까지 가는 안을 과장해서 띄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에 대해 증폭 보도를 하면 상대 당의 의총이나 이런 과정에서 극렬한 비난, 비판이 이루어지다 협상이 좌절되고, 깨

지고, 다시 또 몇 달이 흘러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상안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언론도 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Q. 지금 여야와 정치권과 학계에서 가장 의견 차이가 큰 것 중 하나가 의원 정수 문제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제21대 선거에서 국회의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 선거법이 개정됐고요. 그때 도입된 선거법에서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그로 인해서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가 무려 20%나 높아져서 지금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불신도가 80%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은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많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비례대표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공론화 조사나 언론인 650명을 상대로 한 웹조사에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 국회의원 정수를 절대 더 줄이면 안 된다, 특히 비례대표는 좀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각 당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인 협상 전략으로 그런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 정수를 줄이나 늘리냐 하는 것이 선거법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Q.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의회 외교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유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유치가 성공하게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경쟁국, 특히 사우디에 비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늦게 (유치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과연 우리가 사우디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까라는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국회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특히 민간 기업들이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각국의 입장 발표를 반복할수록 프레젠테이션을 공식적으로 세 번, 네 번 열어나갈수록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상막하 수준까지 와서 결과를 비관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또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일부 나라는 사우디 지지를 했다가 우리 한국 국회의 노력에 부응해서 우리나라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이런 노력을 더 가속화하고 국력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가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과거의 88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 월드컵이 그때마다 한국의 국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부산세계박람회도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재정적으로나 입법적으로나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합니다. 지

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 야당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런 현안을 포함해 대통령 회동 등을 계획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책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은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그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설국회를 두고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만나서 토론하는 목적 자체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 해결할 일이지, 법에서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줬는데 그걸 훨씬 벗어나는 시행령 통치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결국 그에 기반한 행정은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서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로서는 여와 야가 문제된 사안마다 충분한 협의의 통해서,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보완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우리 정치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주 대통령과 만나겠습니다. 또 야당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와 대통령이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최근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사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적절했느냐 하는 논란이 있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야당이 한 것이라는
평가와 국가 외교의 단일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
다는 의견이 대립했는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람직한 의원외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요. 현재 중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보시는지요. 또 의장님의 방중은 구체적으로 언제
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또 한미의원연맹 창설은 언
제쯤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 미국을 방문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대략 언제쯤일까요.

A.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나라나 정
부 외교와 의회 외교는 공공외교의 한 영역으로 서로
협력하고 보완이 돼서 운영될 때 그 나라의 외교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야를 떠나서 의회 외교
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회 외교는 각국의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국민 전체의 의사를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정치적 장점이 있는 데다 당장
정부 외교처럼 무슨 말을 하면 바로 구속되고 실천해
야 되는 게 아니라 긴 장래를 내다보고 양국 국민들 간
의 협력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을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미국, 일본과의 동맹 외교에 치
중할 수밖에 없어 가치 외교를 표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같이 대륙세력과 해
양세력이 서로 만나는 반도 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에 있는 나라의 외교는 균형 외교를 포기할 수는 없습
니다. 그래서 우리와 경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 미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

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최근 방문으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우리 경
제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직도 최대 수출국이
고, 아마 기업들이 중국에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만 해
도 수십만 명에 달할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를 하
루아침에 바뀌 나갈 수 없습니다. 양국이 서로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미처 하기 어려울 때
에는 국회가 나서서 한중 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
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푸는 걸 도와주고, 미래를 향해서도 사드 때와 같은 갈
등으로 바뀌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인접한 국가고, 경제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계를 맺고 있지만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우리 국민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어려운 결단으로 양
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회복이 됐고, 한미일 안보협
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다만 우리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 때
문에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
본 정치 지도자들의 좀 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양국 국민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
아갈 수 있고요.

당면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
해서도 이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지금 하
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일본이 IAEA라는 기관
을 통한 검증만으로 그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모색해야 합니다. 안전한 수단이

확보됐을 경우에도 그 시기를 좀 더 길게 잡고 일정 기간 방류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 보고 다시 피드백하는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Q. 연초와 달리 현시점에는 개헌 이야기가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임기 초반에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고요.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는 얘기가 있고, 올해를 놓치면 앞으로 이제 개헌이 참 어려울 거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여와 야의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째고, 그것을 제헌절까지 마무리지어 여야 간에 생긴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개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섯 분의 전임 국회의장이 매년 개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개헌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선택과 결단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의원들 90%가 넘게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의 헌법이 지난 36년간 우리가 개도국 때에 만들어져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

다. 특히 우리가 정치만 빼놓고는 모든 게 다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마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제도화하는 방안은 결국 선거법 개정에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개헌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는 30년이 훨씬 넘게 못 해 온 개헌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전문을 포함해 모든 걸 다 고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앞으로 제21대국회 임기 내에는 개헌이 실제로 달성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개헌을 합의해 나가면,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총선과 함께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미국 의회를 방문하려는 것은 사실 6월에 한미의원연맹을 창설하기로 미국 측과 잠정적 협의를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의회와 정부 간에 예산 적자 규모를 놓고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길어져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중국과는 작년 11월에 당시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셨고, 그때 약속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방중하려고 했지만 그때 잡혔던 국회 일정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로 미루어졌습니다. 한중의원연맹을 이미 우리 국회는 창설했고, 하반기에 가게 되면 중국 국회도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중 합동의 한중의원연맹 첫 번째 합동 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연내에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

Q. 검찰과 경찰의 국회 압수수색이 점점 더 많아지는 기분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특히 본관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의원회관에 거의 수시로 드나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국회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라는 정치 공간의 상징성이 있는데, 계속되는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밖에서 볼 때 이제 사례가 늘어나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고, 더욱이 불체포특권(폐지)까지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관계없이 압수수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료 제출이나 정보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 그런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다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들과 같은 원칙에서 집행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까 답변한 것처럼 우리 불체포특권이 과거에는 실제로 정치 현실에서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이 과도하게 정치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으려고 헌법 조문에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민이나 언론이 걱정할 정도로 수사권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과도하게 정치권만을 타기탕하는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느끼면 수사기관이나 공권력 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현재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이 자제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국회는 7월 1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M&A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기술투자 금융으로 전면 혁신하고, 전문기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아직 열악하다”면서 “국회와 정부 및 현장이

함께 소통해 ‘투자 보릿고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국내 정책펀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발전 등으로 인해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글로벌 경제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그간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이 유효한지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2021년 12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19일 개최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영상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말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는 83만 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력 72만 명보다 11만 명 많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유발계수(10.6)와 취업유발계수(12.9)는 전체 산업 평균(고용유발계수 8.5, 취업유발계수 12.5)보다 높다”면서 “산업화 민주화 이후 정체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로 5월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계 참석자들은 대부분 한목소리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요청했다.

간담회 제안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와 행정조치사항 등을 포괄하는 총 25건의 후속 해결책을 마련했고 국회 소속기관들은 혁신성장 과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체계를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상시화 전환과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 개선 등 입법 사항을 도출했다.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재정 위원장, 백혜련 위원장 외에 김정만, 김병욱(국민의힘), 김영진, 서병수, 양정숙, 윤관석, 이동주, 정일영,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속기관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장호 국회사무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한다.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 이후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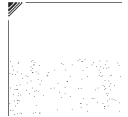
김진표 국회의장, 투르크메니스탄·필리핀 실질협력 강화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20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인민이사회관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로부터 중립 훈장을 받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핵심 협력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을 공식 방문했다. 김 의장은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대통령·국회의장 및 필리핀 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 등 양국 정부 및 의회 최고위급 지도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원전·인프라·방산·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먼저 19일부터 22일까지 호혜적 협력 동반자 관계 15주년이자 수교 30년의 새로운 원년을 맞는 투르크메니스탄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로 공식 방문하고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및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잇달아 회담했다. 또 김 의장은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국회의장으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20일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서는 8년만에 필리핀을 방문해 23일부터 26일까지 로무알데즈 하원의장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후안 미겔 주비리 상원의장을 잇달아 만났다.

투르크 측과 사막지대 특화 방산 협력 확대하고, 한국 의 잠수함 건조역량 필리핀 측 이해 확대

김 의장의 이번 순방 성과로는 먼저 방산·에너지·건설 분야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 참여 확대를 들 수 있다.

김 의장은 방산 분야에서는 사막지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특화된 특수 차량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필리핀의 경우 진행중인 해·공군 뿐만 아니라 육군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특히 한국의 우수한 잠수함 건조능력에 대해서도 필리핀 측의 이해를 깊게 했다.

김 의장은 또 세계적인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과 필리핀(니켈·구리)이 가공 없이 원자재를 수출해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에 착안해 양국 지도자들에게 원자재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천연가스를 가공해 LNG로 쉽게 운송하고,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필리핀의 경우 니켈·구리 등 원석을 반가공 또는 완가공하는 사업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김 의장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특히 7천여 개 섬으로 이뤄져 있어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광업과 제조업에는 소형모듈원전(SMR)이 적합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리하다며 관련 기술에서 앞서 있는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하면서 바탄원전도 한국수력원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있다.

력과 필리핀 관계 당국 간 원만히 협의해 조속히 재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필리핀에서 한국 건설사가 높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필리핀 최고위급 지도자들에게 필리핀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으며, 교역·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인 한-필 FTA 조기 비준 의지를 드러내면서 로무알데즈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어느 의회가 더 빨리 비준하는지 내기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30엑스포 11월 최종 무기명 투표… 실제 표로 이어지도록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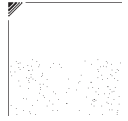
투르크메니스탄과 필리핀의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를 다진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올해 11월 국제박

람회기구(BIE) 총회 최종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집했던 표가 실제 투표로 연결되도록 관리하는 ‘맵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1일자 투르크메니스탄 현지 일간지(뉴트럴 투르크메니스탄)는 김 의장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의 회담을 소개하면서 ‘김 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산엑스포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테르테 부통령도 한국의 높은 유치 역량을 알고 있다며 지속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로부터 최영에 훈장 수훈하고 국회 연설

그 밖에도 김 의장은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로부터 투르크멘어로 ‘중립(neutrality)’이라는 뜻의 최영에 훈장인 ‘비타랍릭(Bitaraplyk)’ 훈장을 수훈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24일 필리핀 하원에서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과 업무 오찬을 갖고 있다.

굴마노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연설해 한-투 의회외교 발전과 천연가스·건설·의료·수자원·섬유·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국내 및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필리핀 고위급간 소통 창구 역할도 적극 수행했다. 김 의장은 전날 마닐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 간담회에서 제기된 설탕세의 과도한 인상 우려, 필리핀 우수인력의 한국 도입, 원전 협력 확대 등 건의 사항을 부통령 및 상원의장에게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으며, 로무알데즈 의장의 광물 개발협력 제안에 대해 귀국 후 대한 상의 및 관련 기업들을 만나겠다고 답하는 등 국익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의회외교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필리핀 하원, 김 의장 의회 방문에 맞춰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결의안'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그 밖에도 필리핀 하원은 24일 김 의장 방문에 맞춰 만장일치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통과시켜 김 의장의 필리핀 방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순방에는 한-투르크메니스탄 의원친선협회장인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어기구 의원, 김재준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 개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7월 24일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 수조사 결과에 따른 국회 차원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7월 24일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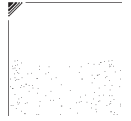
김 부의장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이 유기되거나 사망했다는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출산·양육에서 위기를 겪는 임산부와 한부모를 돕기 위한 상담과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사실상 ‘유령’ 상태인 출생 미신고 아동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간담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미등록 아동의 사망 사건 발생 직후, 또 다른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복지부에 이주배경 등 외국인 미등록 아동까지 추가 조사확대와 미등록

아동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사례분석 등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출생 미신고 아동과 위기 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 지원 시스템 마련, 위기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주제로 송다영 인천대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이다정 프로젝트팀 ‘사회적부모’ 간호사,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 김지연 보건복지부 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최근 경찰청과 지자체 자료조사를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추정되는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 45건을 추가로 밝혀냈고, 정부는 이를 시급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 충북 수해현장 긴급복구작업 실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7월 20일 충북 상당구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7월 20일 충청북도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와 금관숲 인근에서 상당구 당협소속 시·도의원 및 청년·일반당원들과 함께 긴급피해복구작업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511.7mm로, 1973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주 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 주택침수 및 붕괴, 도로 및 하천방재 시설 유실, 농작물 및 차량 침수 등으로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보았다.

이에 정 부의장은 청주 지역 내 도움을 바라는 소규모 피해현장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수재민을 위로하고 복구작업을 실시했다. 정 부의장은 “수마로 소중한 가

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철 등 낮은 지대에 침수 대비 시설을 설치하고, 극한호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재해재난·국민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과 피해복구의 신속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행정력과 국회의 총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에도 정우택 부의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86명을 포함한 보좌진, 당직자 및 당원 500명은 충북 청주시 일대를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국회사무처, 한국체육대와 업무협약(MOU) 체결



국회사무처와 한국체육대가 7월 10일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7월 10일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체육대와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체육대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올바른 운동 방법 연구, 국회 스포츠 활동 및 동호회 지원, 스포츠문화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스포츠를 통

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국회사무처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국체육대와의 업무협약이 건강한 국회,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이광재 국무사무총장과 권영진 입법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체육대에서는 문원기 한국체육대 총장, 김진호 대학원장, 정광채 스포츠과학대학장 등이 참석해 국회와 한국체육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특집

생성형 AI 관련 입법 동향과 과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교육, 산업, 예술 등 전 영역에서 상용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EU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법(AI Act)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생성형 AI는 무엇인지,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과 우려사항, 국내외 입법동향과 과제 등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산업, 문화, 교육 등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과 우려

정종기 한국인공지능인재개발원장

생성형 AI와 국회 차원의 대응 전략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생성형 AI 관련 규제 및 해외 입법 동향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국회의 입법 동향과 과제

남은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산업, 문화, 교육 등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과 우려

전 세계는 챗GPT를 위시한 생성형 AI의 혁신적인 진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산업 및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즉, 대화,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AI) 기술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대규모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FM)이라고 한다.

분야별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요약, 답변, 그림, 동영상, SW 코드 생성도 순식간에 만들어 준다. 이러한 생성형 AI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기업의 경쟁력은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생성형 AI는 전 산업 및 기업의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가치사슬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획, R&D, 구매, 생산, 유통, 판매 및 마케팅 등 주요한 업무 영역에서 활용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산업별로 생성형 AI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조 분야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동화된 제품 디자인 및 품질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생성형 AI 모델은 과거 제품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생성하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감지해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조공정 효율화, 품질관리, 텍스트 비정



정종기 원장
한국인공지능인재개발원



형 데이터 분석 기반 이상검출 및 고장 예측과 수명 예측 서비스 등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활용 사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사용해 의료 이미지(예: X-ray, MRI)를 분석하고 질병이나 이상을 감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신물질의 개발, 신약 개발 등에서도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다.

과거 R&D 분야는 끊임없는 연구와 시행 착오의 반복이었다. 예를 들어 제품 설계를 위해서는 시제품을 소량 제작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오랜 시간을 들여 반복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연구원들이 중량, 비용, 소재 등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수많은 디자인 시안을 짧은 시간에 생성해 준다. 연구자들은 원하는 결과에 근접한 시안을 선택하면 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창작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사용해 새로운 음악 작곡, 그림 및 그래픽 디자인, 시나리오 작성 등을 자동화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생성할 수 있다.

마케팅 영역에서는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주 업무는 제품 홍보글 작성, 블로그 포스팅, 마케팅 이메일 발송 등이다. 이 모든 것을 생성형 AI가 쉽게 만들어 준다. 실제로 한국의 마케팅회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과거 5시간 이상 소요됐던 1천자의 광고 문구와 새 웹사이트에 들어갈 카피 문구를 10분의 1에 불과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교육 관련 분야 역시 많은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다. 먼저 개인화 학습 영역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학습 스타일,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학습 자료를 생성하거나 맞춤형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다양한 산업, 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면서 생성형 AI의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우려 사항도 많아지고 있다. 생성형 AI를 업무 효율화와 생산성 증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기존 업무에 활용해 보려는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생성형 AI도 장·단점을 함께 가진 신기술인 만큼 기업 내부에 적용하는 데 있어 경영진의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생성형 AI는 질문(프롬프트)을 통해 답변을 생성한다.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답변에 필요한 상세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고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기업의 정보 유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데이터의 보안 문제에 따라 외부 상용 AI 서비스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생성형 AI의 도입은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내부 직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큰 부서부터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업무 방식이 자신의 기존 노하우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 있고 새로운 업무 방식을 익히는 일을 번거롭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많은 기업이 생성형 AI를 단계별로 도입해 AI 기반 업무활용 및 자동화를 통해 업무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복잡하고 고도화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성형 AI와 국회 차원의 대응 전략

작년 11월 말 Open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바야흐로 전세계에 초거대 AI를 포함한 생성형 AI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2016년 알파고 때와 다른 점은 알파고는 바둑이라는 특정 분야에 국한된 반면, 최근의 생성형 AI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일하는 데 필수적인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현 등에서 일반적인 사람 이상의 생성 품질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업무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실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구독 형태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이 큰 차이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성형 AI 기술은 인터넷, 모바일 혁신을 넘어 전기, 인쇄술의 발명에 비견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로 생성형 AI가 사회와 산업에 끼칠 영향은 대단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정 기술을 넘어 사회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3월 24일 OpenAI가 발표한 챗GPT 플러그인은 앞으로 사용자들이 대화로 얘기하면 AI가 그 의도를 파악해서 필요한 앱들을 실행하는 말그대로 영화 ‘Her’나 ‘아이언맨’의 자비스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월 24일 11개로 시작했던 글로벌 플러그인 앱들의 수가 7월 현재 700개가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반 기술의 특성상 이 기술이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만든 초거대 생성형 AI 중심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 이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와 AI와 만든 모든 데이터가 글로벌테크 기업의 클라우드로 블랙박스처럼 빨려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데이터 주권 상실로 이어지며, 축적된 데이터가 AI의 능력을 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AI 기술 종속으로 이



하정우 센터장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거대
공공 AI TF팀장)



어질 위험이 있다. 그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초거대 AI는 영어데이터 중심으로 구축된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쓸 때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느낄 수 밖에 없어 GPT4의 경우 4.5배 정도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량의 영어 문서 데이터에 녹아 있는 영어문화권의 사고관과 가치관이 자연스레 초거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녹아나온다는 점이다. 100여 년전 주시경 선생께서 “나라말과 글을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나라 초거대 AI를 잃으면 나라의 문화나 얼을 잃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더 나아가 AI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활발한 움직임까지 고려하면 초거대 AI 보유국이 핵 보유국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과 더불어 초거대 AI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3개 국가 중 하나다. 네이버는 OpenAI GPT-3, 화웨이 판구알파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를 개발완료하고 공개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LG, 카카오, SKT, KT 등 다수의 기업이 자체 초거대 AI를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2022년 9월에 설립하고 올해 4월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며, 특히 초거대 AI를 활용한 공공분야 혁신을 위해 초거대 공공 AI TF를 출범해 복지, 재난, 청년, 공무원 업무행정, 민원 등에서 혁신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문서를 AI가 읽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그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초거대 AI 지위 유지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필요

이런 초거대 생성 AI 시대에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초거대 AI 2~3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AI Act가 매우 강력한 규제 내용으로 의회를 통과했지만 EU는 자체 초거대 AI도 없고 글로벌 테크기업도 없기 때문에 취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법안 제정에 있어서 규제는 기술 개발과 혁신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악용 방지와 같이 나쁜 의도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내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테크기업과 체급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정부에서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안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처럼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공영역 활용을 전제해 정부가 초거대 AI에 필요한 인프라 구입에 공동투자를 하되 민간 클라우드 AI기업이 운영토록 하고 초거대 AI 기반 사업의 여러 규제들을 해결하는 진흥법이 중요하다. 또한 초거대 AI의 공공영역 적용에 있어서 CSAP 상등급 대신 중등급의 많은 공공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공공에 기여해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초거대 생성 AI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본, 중동, 동남아와 같은 자체 초거대 AI를 원하는 국가들에 진출해서 미국, 중국에 이은 제3의 세력을 만들어 새로운 국가 성장엔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야 할 시기다. 🍵

생성형 AI 관련 규제 및 해외 입법 동향

2022년 11월 30일 출시된 OpenAI의 챗GPT는 이용자가 지시어를 입력하면 해당 지시에 맞춰 마치 사람이 작성한 것과 유사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챗GPT는 출시 5일 만에 백만 명이 사용하는 등 인공지능 서비스 분야에서 전례 없는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챗GPT를 계기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개발·이용이 보다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 데이터(생성된 결과물 포함)의 정확성,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규제 및 법제 개선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분야인 개인정보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및 해외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정보 규제 사례 및 입법 동향

개인정보와 관련, 학습된 데이터 및 ‘생성된 결과물’(이하, ‘생성물’)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가장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챗GPT 서비스 개시 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각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는 챗GPT의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가능성을 조사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3월 31일 챗GPT 서비스를 중단 시키고,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제공, 수집한 데이터의 법적 근거 및 이용자 연령 확인 수단 부재 등 지적사항이 개선된 것을 확인한 후에 서비스 재개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외에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을 지침 형태로 마련한 사례도



채은선 수석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있다. 일본이 6월 1일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정지침’ 및 6월 15일 뉴질랜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가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유의사항’(지침)이 그 예다. 특히 뉴질랜드 지침은 인공지능 개발부터 이용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및 공급자가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규정’(2023년 8월 15일 시행) 또한 학습데이터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할 사항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 규제 사례 및 입법 동향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성물’은 보조적 분석·예측이 아니라 이용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정리된(최소한, 정리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해당 생성물이 저작물인지, 저작자 및 저작권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는 문제 또한 다뤄지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 2023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은 사람이 글을 작성하고 미드저니(Midjourney)가 생성한 그림으로 구성된 ‘만화 소설’(graphic novel)의 경우, ‘글’은 저작물로 인정했으나, 그림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미국 저작권청은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난 3월 16일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지침’을 마련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우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 인공지능과 사람이 기여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저작물 등록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학습데이터와 관련, EU 의회가 6월 14일 채택한 ‘인

공지능법안의 수정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공급자가 해당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에 관한 상세 요약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 부과는 저작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규정’ 또한 학습데이터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학습데이터 이용 시 저작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 및 저작권 외에 공정한 이용 및 불법적 이용 방지 등을 이유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일정한 표식을 하도록 하는 입법 사례도 있다. 미국 연방 인공지능공개법안(HR 3831)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모든 생성물에 “이 결과물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다”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규정’ 또한 기존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합성 관리 규정’에 따라 합성데이터 표식을 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정치광고와 관련해, 미국에서 발의된 정치광고 표시에 관한 법안(HR 3044; S 1596)은 정치광고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동영상이 포함된 경우, 분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그러한 이미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각종 규제사례와 개별 문제 해결 성격을 지닌 입법 경향은 현행 법질서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법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지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이를 적용한 서비스 또한 보다 다양해지고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이 계속해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합적·전체적 관점에서의 법제 개선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것이다. 🏠

국회의 입법 동향과 과제

최근 챗GPT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허위나 부정확한 정보 사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인공지능 산업 진흥 등 뒷받침 위한 인공지능 관련 제정안

이에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성 확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제정안은 총 8건으로, 이 중 7건은 대안에 반영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고 1건은 심사 중이다.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 육성 및 시범사업 지원 등 인공지능 관련 국가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둘째,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양향자의원안)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에서 국가인공지능기본계획을, 지방인공지능기술위



남은정 입법조사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회에서 지방인공지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필요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넷째,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필모의원안)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윤리적 원칙의 준수 등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사회위원회를 설치하며, 특수활용 인공지능에 규제를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윤리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다섯째,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용빈의원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설치하며,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인공지능집단지 지정,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마련 등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여섯째,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윤영찬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험인공지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의 보호를 규정하며,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등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내용이다.

일곱째,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두현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치하며,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 등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발전 추세를 고려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인공지능 책임법안’(황희의원안)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고위험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책무, 고위험인공지능 이용자의 권리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존에 발의되어 있는 7건의 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 추진,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인공지능에 관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현재 인공지능 산업은 역동적으로 성장 중이고, 전 산업에 인공지능이 내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앞다투어 개발하고 자국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이유다. 하지만 챗GPT에서 보았듯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높은 효용성을 제공하면서도 한편으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국회는 조속히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익 지켜낼 것”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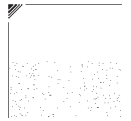
Q. 외교통일위원회 소개와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말씀해주시시오.

A. 외교통일위원회는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구성된 역사 깊은 위원회로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외교, 안보, 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업무를 맡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연계된 미중 패권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이어서, 외교통일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 막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제21대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으면서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국회가 다른 사안은 몰라도 국가의 명운이 달린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는 허심탄회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를 운영하며 여야 간 소통과 협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세우고, 비록 다소 더디더라도 여야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국제정치가 격변하는 시기입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국익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국제정세에 어두워 쓰라린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칫 신냉전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국익을 지켜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Q. 제21대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안보, 통일 정책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모색해 왔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올해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민방문이 12년 만에 성사됐고, 국민께서 가장 걱정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핵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명문화한 ‘위성된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멈춰던 서틀외교가 재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시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국회가 다양한 여론을 펼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됐지만, 그래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협치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인데,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에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때 여야가 함께 지진피해 복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 ‘재외동포 기본법안’을 통과시켜 재외동포청이 순탄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Q.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는 무엇일까요.

A.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무장관, 재무장관 등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해빙의 조짐을 보이긴 하지만, 미중 갈등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뿐 아니라 대만해협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북한은 신냉전 분위기를 틈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지혜롭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입니다. 정부가 잘해나가고 있지만, 국회도 국정 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줘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쟁점이 됐지만, IAEA가 최종보고서를 내놓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철저히 사후 모니터링을 해서 공개하기로 했으니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의정활동 철학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A. 의정활동을 하며 국민에게 쓸모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은 여야가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외정책의 방향을 잘 잡아가야 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 과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저출산 문제, 빈부격차와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까지 여야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공존’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성심껏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야 모두가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할 때입니다. 🍵

글 김영선 사진 임진완

‘치대국약팽소선 (治大國若烹小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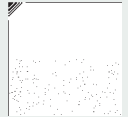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경상북도 경산시)

YTN 보도국장과 청와대 홍보수석을 거쳐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윤두현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치대국약팽소선(治大國若烹小鮮)’이다. ‘치대국약팽소선’은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살이 뭉그러지기 쉬운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아서, 빨리 익히려고 자주 뒤적거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는 뜻이다. 윤두현 의원을 만나 그의 인생 좌우명과 의정활동,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씀을 들으며 컸다”는 윤두현 의원은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조심스럽게 결정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신문사에 입사할 때 부장과 정년퇴직이 목표였는데, 정년퇴직은 못했지만 부장을 넘어 국장도 하고 계열사 사장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수석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해야 할 것을 하되 늘 조심하고 철저하게 대비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스스로는 신중함을 지키며 살았지만 언론사 간부가 되면서 기자들에게도 이런 자세를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나의 일처리 방식에 맞추다 보면 다양성이 사라지고 조직이 정체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데스크가 일선 기자의 기사에 너무 개입하면 그건 데스크의 기사지 기자의 기사가 아닙니다. 기사의 내용이 상식에 맞는



지, 소송에 휘말릴 위험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며 지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율권을 주고 알아서 하도록 했더니 창의력을 발휘하고 현장에서 적응력을 키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더군요.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체득하면서 한비자의 ‘해로편’에 나오는 ‘치대국약팽소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스스로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이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며 살았다”고 했다.

인터넷 포털에 사회적 책임 부여하고 언론 환경 개선하는 입법활동 벌여

정치 입문을 결심한 계기를 묻자 윤 의원은 “기자는 기사를 통해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일을 한다”며 “그러다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아 실제로 제도나 사회의 모순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정치를 통해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이 시대 흐름에 맞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뉴스를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언론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를 입증하듯 그는 국회 입성 후 인터넷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왔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연대배상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영

리성 검색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비영리성 검색정보를 별도의 화면 등을 통해 구분해 제공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명시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그가 대표발의한 법률안들이다.

윤두현 의원은 “전공분야인 언론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기자들이 진실을 전달해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산시가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열린공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잇따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윤두현 의원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ICT산업 쪽으로 더욱 매진해야 하고 지역구인 경산도 그런 의미에서 ICT 중심 산업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품종 대량 생산 사회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창업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잘 안됐을 때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산업지형을 바꿀 ICT 업종에서 진출입이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저는 1960년대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을 넘겨줄 때 우리 후손들도 ‘앞사람들이 잘 해서 우리가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지범



이재정 의원

이재정 의원이 지성호 의원을 칭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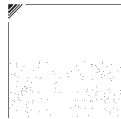


**“남다른 배려심으로
믿음을 주는 분”**

지성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8월호 ‘칭찬합니다’의 주인공은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다. 지난 달 그를 추천한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복지나 제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을 유심히 보게 됐는데, 어떤 고민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어떤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임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남다른 배려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믿음을 주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보의 ‘칭찬합니다’라는 코너가 여야를 넘는 의원의 화합의 장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외통위에서 인연을 맺었던 이재정 의원님 덕분에 이런 의미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0년 비례대표로 제21대국회에 입성한 지성호 의원은 14세였던 1996년 생계를 위해 석탄을 훔치던 중 기차에 깔려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겪었다. 꽃제비 생활을 하던 2000년, 중국에서 식량을 구해오다 보위부에 들켜 구해온 식량을 모두 뺏기고 고문을 당했던 불운도 경험했다. 2006년 탈북 당시 한쪽 팔과 다리 없이 목발을 짚은 채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 라오스, 미얀마 등을 거쳐 태국까지 6천 km를 이동해 한국에 도착했다.

그는 한국에 정착한 이후 북한 인권 단체인 'NAUH'를 설립해 탈북민 수백 명을 구출했고, 2018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 연설에 참석해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정치 입문 전 10년이 넘는 시간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가였던 셈이죠. 지금도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멈춘 것은 아니니 여전히 북한 인권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탈북 모자 아사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을 경험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3만 5천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도권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부재한 것에 큰 책임감을 느꼈지요. 만약 이들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있었다면, 아사하는 비극도, 또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지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대표발의했던 첫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순간을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으로 꼽았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0년 이상 체류국에 거주한 탈북민도 초기정착지원금을 비롯한 모든 정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불합리한 규제

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첫 결실을 이룬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임기동안 반드시 추진·해결하고 싶은 현안 또한 ‘탈북민을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과 ‘북한인권박물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힌 그는 현행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제도가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인권박물관 설립은 임기 내에 꼭 이뤄야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박물관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북한이 계속해 북한이탈주민을 범죄자라 주장하고, 왜곡된 거짓을 선전하는데, 그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인권박물관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그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거듭 강조했다. 우여곡절의 인생도, 정치도 ‘진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국회에 들어와 지금까지도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한분 한분 직접 찾아 현안을 듣고 의원실로 찾아오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지성호 의원은 다음 칭찬주자로 김희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여수을)을 추천했다.

“김희재 의원님이 강단 있게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참으로 올곧은 심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은 여야를 떠나 다음 주인공으로 추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핸드볼 영웅’에서 국민의 대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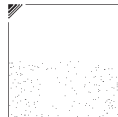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이자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의 실제 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임오경 의원. 핸드볼 국가대표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을 따낸 그가 국회에 왔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역구인 광명의 살림꾼으로 거듭난 그를 국회보가 만났다.

운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다

전북 정읍에서 2남 6녀 가운데 다섯째 딸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핸드볼에 입문했다. 학창시절 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말수도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임 의원은 그러나 “골을 넣고 환호할 때의 그 짜릿한 기쁨도 좋았고 시합 후 선생님이 사주신 자장면의 맛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988년, 18세의 나이로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됐고 이후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의 간판스타가 된다.



“운동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힘을 합쳐 정상에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임 의원은 1994년에는 일본 여자핸드볼 리그의 신생 팀으로 이적해 입단 2년 만에 플레잉코치(선수 겸 감독)가 됐다. 2부 리그였던 팀을 1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시켰던 것. 그 후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시와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성화 봉송에 참여했을 정도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는 2008년까지 팀의 감독을 맡았다가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이 창단되자 고국으로 돌아온다.

임오경 의원은 “귀국한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고사했다. 비인기 종목 스포츠의 여성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정유라 사건 이후 체육계 전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면서 핸드볼 같은 비인기 종목까지 지원이 줄고 정부 예산이 삭감되는 후폭풍이 몰아닥쳤어요. 그저 운동만 하면서 묵묵히 살아온 세월에 화가 났어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체육계 미투 사건 등을 겪으며 그는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고민 끝에 2020년 1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오로지 ‘인간 문제인’을 존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21대국회에 들어온 뒤 문체위에서 활동하던 그는 최숙현 선수 투신 자살 사건과 관련, 진상 조사와 함께 강력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힘썼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설명

했다. 두 개정안은 모두 학생과 체육인 등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와 체육시설의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명을 ‘국가대표 명품도시’로 만들 것

임오경 의원은 “경기 광명시는 오랫동안 베드타운 기능을 담당해왔다.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처음 세웠던 목표는 광명을 진정한 자족도시, ‘국가대표 명품도시’로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광명을 ‘국가대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난 3년간 국비 및 도비 약 3천600억 원 이상을 투입했고 2023년에는 5천여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지역의 교통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오랜 갈등을 빚었던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백지화했습니다.”

‘핸드볼 영웅’이 국회에 입성했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스포츠 스타라는 이미지가 있으니 가급적 튀지 말라”는 조언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정치 전면에 나섰다. 그는 “브리핑 무대에 처음 섰던 날, 기자들 표정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다. 대변인을 하는 동안 최대한 올바르게 당당하게 사실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떠올렸다.

“저는 정치란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정치 아닐까요. 저는 비록 초선이지만 표만 쫓는 ‘정치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를 직업으로 삼은 ‘정치가’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핸드볼 선수에서 진정한 ‘정치가’로 임오경 이름 석 자를 남기고 싶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 등 주제로 토론회

· 탄소중립 흙 살리기 국회토론회

서삼석·서동용·신정훈·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은 6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주제로 탄소 중립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 문제 극복 과정에서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한 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전남 구례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례밭, 지속 가능한 환경’ 운동을 전국으로 전파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2022년 ‘탄소 중립 추진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필주 경상국립대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과 새로운 기회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친환경 농업 전환을 통한 토양 등 농업 분야 탄소 저장능력 확대 방안에 대해, 홍성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은 구례군 탄소 중립을 위한 토양 탄소 저장 및 합리적 토양 관리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또 이승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탄소 배출권 확보 및 농촌과 산업과의 탄소 저장수익 공유방안에 대해,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은 토양 탄소 저장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과 해외 사례 등을 발표했다.

·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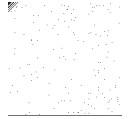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6월 26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가산업단지 지역인 광양, 여수, 남해, 하동, 포항 등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별 국가산업단지 주민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생활환경과 주민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1부 사례발표는 정종길 남해군 서면 노구마을 주민이 광양·여수·남해·하동 지역 피해를 발표하고, 최광열 포항시의원의 포항 지역 피해 사례발표에 이어, 유종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장이 당진 지역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2부 발제는 박수완 전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생활환경 및 주민건강 문제점’을 주제로, 박삼성 변호사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3부 토론은 윤미향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은주 포항시의원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고, 송봉준 윤미향 의원실 보좌관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



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과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6월 27일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이슈를 확인하고, 지역의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정기부금 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관 서천부군수는 주제발표에서 '서천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 전략과 제도의 한계'를,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염명배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길남 전남 영암군 차지행정과 주무관,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 유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각각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언론이 본 고향사랑기부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

을 진행했다.

•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28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공인중개사들이 역전세로 인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 전세시장의 문제점, 정부·국회의 정책적 법률지원 요청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2023년도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 공인중개사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되짚어보며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사고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의 규제완화, 세입자와 임대인 매매 계약시 혜택부여(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명주 공인중개사협회 정책특보는 역전세에 더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수빈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사무관 등 정부 측 패널도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세입자 및 후속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토론회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7월 3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경희 의원이 기획한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로, 초등생부터 고교생까지 연령 구분 없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실태와 급증하는 미성년 마약사범 문제를 진단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10대는 물론 모든 국민에 마약 관련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일옥 삼육대 간호학 교수는 “대한민국은 마약 사범을 줄이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마약의 굴레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은 대한민국은 중독 치료나 재활에 대해서는 가장 후진국이라고 지적하며 “어릴 때부터 치료, 재활에 빨리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재활과 더불어 교육 방식 개선도 언급했다. 김일옥 교수는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교과 과정에서 마약을 다룬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로 해서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수능 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김상희,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박홍근, 양기대, 이재정, 이학영, 전재수, 진선미, 홍기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남국 의원(무소속)은 7월 5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능 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킬러문항 삭제’ 및 ‘수능 절대평가’ 등 수능 사태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이 아닌 입시에만 관심을 두는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을수록 최상위권대를 향한 입시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 서열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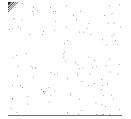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수능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공 관련 수능 선택과목에 가중치 부여,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추가 반영, 면접·논술 등 추가적인 평가 시행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교육 유발의 근원으로 꼽히는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등의 정책은 오히려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어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며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을 포함한 2028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려동물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월 5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이용빈·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



부,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보건사 협회, 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한국동물복지연구소 등이 함께 했다.

또한 건국대, 나주동신대, 삼육대, 연성대, 원광대, 인제대, 호남대 등 7개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산업 관련 발제와 전원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육 관련 발제는 ‘반려동물 복지 확대와 현장적용을 위한 입법정책’을 주제로 이진홍 건국대 교수가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려동물 사전(또는 사후) 의무교육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교육 확대, 지자체, 소방관,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관련자 교육 강화, 국립 반려동물교육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황운하·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7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정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좌장은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주제로 이동통신 3사의 사업과 통신 요금 현황을 분석해 통신 3사가 특정 세대 및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보다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통신시

장의 경쟁상황과 통신비 적정성’을 주제로 5G 요금 수준의 적정성은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촉진 정책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계통신비 관점의 종합적 접근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적정 요금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7월 11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 가능한 유료방송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TV홈쇼핑협회, IPTV협회, 유료방송사업자, 홈쇼핑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송출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 유료방송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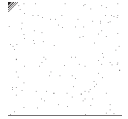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했으나 산정 기준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간담회의 사회는 김정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았고, 김용희 동국대 교수가 ‘유료방송플랫폼과 TV홈쇼핑채널의 공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 이상경 한국IPTV방송협회 센터장,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이 참여해 채널별 공개 입찰 제도, 가이드라인의 재개정, 대가검증협의체 세부 운영 지침의 필요성 등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상생·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197건, 6.22~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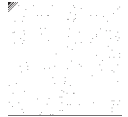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6.22(목)	제2회 2023 의원의외교 세미나: 한일관계 대전환의 전략	국회평화외교포럼	의원회관 제321담회의실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국회모빌리티포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황운하, 김두관, 김병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	약자의 눈	의원회관 제321담회의실
	6·25전쟁의 교훈과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미래	한기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K-모듈러 건축·주택산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근로자 건강 보호방안	이수진(비례) 의원실	의원회관 제221담회의실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핵심 원료 수급, 물류 혁신,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김화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탄소중립 흙 살리기 국회토론회: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삼석, 서동용, 신정훈, 이태규, 홍정민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피해사례 청취 및 필수물품 기준 구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피해사례 발표대회	김한규 의원실	의원회관 제721담회의실
6.23(금)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6강	최기상 의원실	의원회관 제921담회의실
	중증천식 진료현황과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221담회의실
	양지회 국회 안보토론회	박덕흠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신동근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6.26(월)	제2회 백선업 장군 서거 3주기 추념 안보학술 세미나	홍석준, 조정훈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용, 문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부의 노조운영 및 노사관계 개입 문제점과 개선과제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821담회의실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를 위한 발전방안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의원회관 제921담회의실
	인문사회학술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유기홍 의원실	의원회관 제521담회의실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국회자살예방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디지털 기술 혁신과 문화예술 창작·유통환경 변화	국회혁신4.0연구포럼	의원회관 제821담회의실
	5·18국제연구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형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921담회의실
	'국가보훈부 출범 기념 세미나' 국가보훈 패러다임의 대전환	윤주경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철도망 구상 세미나' 시리즈 #1- 중부내륙철도망	소병훈, 이종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27(화)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연구	약자의 눈	의원회관 제221담회의실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혁신 간담회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국회본관 민주당당대표회의실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대토론회	홍석준, 이주환, 이은주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대회의실
	'전기차 미래 정책 세미나' 국민이 안전한 전기차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김학용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반도 군사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	이인영 의원실, 국회한반도경제전략 연구회	의원회관 제821담회의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장동혁 의원실	의원회관 제721담회의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기홍, 박찬대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6.28(수)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의원회관 제421담회의실
	2023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6.28(수)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
	위기의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김민석, 이상현, 고영인, 이용빈, 강은미 의원실, 약자의 눈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김한규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경제위기대응센터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연구직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임호선, 송재호, 이형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강민정, 류호정, 심상정, 윤미향, 이은주,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SMGS(화물운송협정) 현황과 미래	양기대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 대안인가?	신현영,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	송갑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김수홍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우원식, 강은미, 심상정, 이은주, 강성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박완주, 변재일, 홍익표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6.29(목)	녹색금융 이행점검과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유전상담서비스의 활성화와 유전상담사의 역할	서정숙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12. 디스플레이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소병철, 송재호, 용혜인,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강선우, 김영호, 남인순, 조승래, 최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6.29(목)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이상민, 진선미, 양경숙, 홍성국,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농수산업 현안 및 정책 간담회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권 보장	남인순, 민형배, 강민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하태경, 이상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5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및 2023 한국국가정보학회 하계 학술세미나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6.30(금)	인도적 지원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 토론회	이재정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간토학살 100주기,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피해소송 준비 좌담회	윤미향, 문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2023년 제10회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회-10주년 기념 인구정책 제안 경진대회	최연숙, 남인순 의원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7.3(월)	2023 제2회 민간주도 탄소감축위원회 비전선포식	김학용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대응한 탐정제도의 법제화 방향과 전략: 탐정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의 연계와 발전을 중심으로	김용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	소병훈 의원실 등	광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
	'청소년 불법도박·마약 근절 연속토론회 2차' 청소년 마약 사범 폭증 지금 막아야 한다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김영주, 남인순, 서영석, 신동근, 정춘숙, 한정애,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강성희, 강준현, 권성동, 감성주, 위성곤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메타버스와 윤리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7.4(화)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	국민의힘 포털TF	국회 본관 228호
	도심지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허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	천준호, 이은주, 이동주, 남인순, 이학영, 진선미, 이용선, 윤준병, 이용빈, 양이원영, 안민석 의원실	의원회관 제321담회의실
	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	서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저출산, 이것이 문제다! 간담회' 저출산, '엄빠'께 직접 제대로 들겠습니다!	허은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회부산도서관 제1차 전문가 초청 강연회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 1층 종합자료실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과 협력적 거버넌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의원회관 제421담회의실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신현영, 조명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의원회관 제221담회의실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강선우, 남인순, 오기형, 장경태, 정태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721담회의실
7.5(수)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경제위기대응센터	의원회관 제321담회의실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조정식, 김상희, 김학용, 심상정, 윤호중, 이인영, 김도읍, 남이순, 민홍철, 윤영찬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킬러문항' 식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강득구, 강민정, 강준현, 김남국, 김상희,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박홍근, 양기대, 이재정, 이학영, 전재수, 진선미, 홍기원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증언과 토론: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박주민, 양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제321담회의실
	해사 전문법원 인건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교홍, 박찬대, 맹성규, 배준영, 배진교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 '들'	이은주, 이탄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강득구, 강준현, 김남국, 김민석, 김민철, 김성환, 김승원, 김철민, 문정복, 민형배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미래 여성경제인을 위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한무경, 김한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유통업계 불법과건 조장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321담회의실
	반려동물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이용빈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회관 제221담회의실
7.6(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박정하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6회 국가전략 콜로키움-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재편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
	CF100, RE100의 대안인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에너지전환포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사업자 경제효과 분석 토론회	윤창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박성중 의원실, 국회국가재조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 대안을 찾아라!	양기대 의원실	의원회관 제321담회의실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 '들'	이은주, 이탄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산업·환경분야 전법특별법 제도개선 국회 간담회	안호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원전계속운전 주민 수용성 증진 세미나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미래: 동맹의 북핵대응과 자유통일전략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7.7(금)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이정문, 황은하 의원실,	의원회관 제821담회의실
	넷제로 윤석열 정부 전력산업정책이 가야할 길	양이원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621담회의실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맹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	안민석 의원실	국회의사당 본청 영상회의실
	'뉴욕타임스 아시아본부 서울시대 Brown Bag 세미나'	조웅천, 박성민, 조정훈, 권명호, 김미애, 박수영, 서범수, 안병길, 양향자,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제321담회의실
	뉴욕에 밤이 오면 NYT편집국은 서울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	박성중, 서정숙, 김희재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Dr. Rosetta Hall 기념관 개관 2주년 기념 심포지엄] Dr. Rosetta Hall을 기억하다.	배준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탄소중립과 기본소득	우원식, 옹혜인, 김남국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한국 교육 미래 전략 포럼'-창의와 다양성 교육을 중심으로	이태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디지털교육 확산 및 에듀테크 진흥방안 수립 정책 간담회	김병국(국), 김한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북방정책 35주년, 회고와 전망	더불어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제821담회의실
	안전한 학교 통학로 만들기 학부모 간담회	조경태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사하지사 2층 대강당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7.10(월)	2023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윤재옥, 김태년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	윤희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핵안보 국방학술세미나'-워싱턴 선언의 함의와 핵 민방위체계 구축정책의 지향방향	서정숙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문신 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농림분야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국회 세미나	안호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7.11(화)	학생 마음 건강 행진 국회 토론회	김병국(국)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윤희인, 오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돌봄노동자 건강실태조사 발표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바이오벤처 투자활성화 전략과 지원정책 모색	정일영, 최재형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대학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서병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TV 흡수징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7.12(수)	'2023 반도체정책세미나'-반도체 판이 바뀐다, K칩 생존 조건은	양향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토론회	양기대, 최형두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향한 스마트복지의 길-개도국에의 시사점	서정숙, 김성주,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법안, 어디까지 왔나?	정춘숙, 김상희, 이재정,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건설분야에서 효율적 산재 감축 방안 모색	이수진(비례)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7.13(목)	방위산업 보안정책 세미나	양기대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심상정,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 원청갑질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	김영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최영희, 강기윤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서울안보포럼 창립행사 및 기념세미나	신원식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7.14(금)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류호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민병덕, 박주민, 오기형,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	국회 유니콘팜	살롱2 여의도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엄태영, 박대수,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	이달곤, 김형동 의원실	국회박물관2층 강당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권법 토론회	이수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7.14(금)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7월 정책 세미나' 한·인도 수교 50주년, 미래 50주년을 연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지금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이유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출생미등록 아동문제, 근본적 해법은?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남인수, 김성주, 서영석, 최종윤, 최혜영, 강은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강준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범정부적인 대북 전쟁억제 추진전략 발전방안	신원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7.14(금)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를 밝힌다 정책토론회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간담회의실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역혁신을 위한 초거대AI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국회 세미나	윤두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약자의 눈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컴퓨터적응시험(CAT) 도입을 중심으로	인재근, 최연숙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소병철, 권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7.14(금)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김희재, 서동용, 소병철, 윤재갑, 김형동, 김명선, 강기윤, 윤한홍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제한절 아침, 제한 국회 속기록을 읽다	김형동, 박정하, 조은희, 유의동, 이태규, 최재형,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국가적 입양 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미애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분산에너지 체계 활성화 위한 전기저장설비의 역할과 안전성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	김성환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7.17(월)	다변화하고 있는 철도환경, 안전한 철도를 위한 시설유지보수 방향과 대안	서영교, 한준호, 강은미, 심상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박범계, 박병석, 박영순, 이상민,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정책세미나	위성곤, 김희곤,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23 신종팻샵 피해자 국회 간담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제5회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처	한중의원연맹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신냉전시대 경제-무역전략 토론회	신원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허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3] LG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오토 경영의 역할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7.18(화)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	조승래,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장경태, 정필모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국회 생명안전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한미동맹 70주년, 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협력 확대 전략 세미나	한기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AI 기술 활용’ 기후예측 및 대응을 위한 토론회	홍석준, 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초고령 사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한정애, 고영인, 강선우, 이수진(비례)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인의 자립효과와 지원방안	정우택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	유기홍, 서동용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육성방안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	신현영, 조명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국과 호주 함께 여는 미래	윤재옥,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강민정, 민형배, 박성준, 이상민, 이탄희, 심상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7.19(수)	중자산업 육성을 위한 신육종기술 활용 제고	이달곤, 정운천, 정희용,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긴급 토론회’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국회본관 245호
	강소연구개발특구 미래 발전전략 정책 토론회	이정문, 전해철, 김경호,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동물을 돌보는 마음: 국내 생추어리 현황과 과제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프랜차이즈 지원 방안	권철승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전국 5년 공공임대아파트 전세사기 피해 대표단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회관 348호
	ESG기본법 제정 시장에서 듣는다	이원욱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	강민정, 강은미, 이은주, 강성희,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미동맹 70주년 UN참전기념 70주년) 자유와 연대 기념법안 정책토론회	강기윤, 구자근, 김상훈, 김성원, 김영선, 김예지, 김경재, 박수영, 신원식, 안철수,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대형복합쇼핑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병훈 의원실	광주 전일빌딩245, 8층
7.20(목)	스마트공장 활성화 공급기업 간담회: 스마트팩토리 예산 증액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김경만 의원실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장경태, 황운하, 장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지명 문제 후보추천위원회가 대안	최기상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박대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아청소년암 필수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정숙, 김미애, 이종성,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환 평가 및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현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과제 세미나] 경영방송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s://ampos.nanet.go.kr:7443/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깔 자랑하는 쫓불맨드라미

닭벼슬 모양의 일반 맨드라미와 다르게 쫓불 모양을 한 쫓불맨드라미가 화려한 색깔과 모양으로 화합의 꽃밭을 수놓고 있습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고온에 강한 쫓불맨드라미의 꽃말은 ‘타오르는 사랑, 시들지 않는 열정’이라고 합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임진완

지역 공공의료 인력 부족, 여야 함께 해법 찾는다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서삼석(전라남도 영암군무안군신안군)·신정훈(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김원이(전라남도 목포시)·김희재(전라남도 여수시)·소병철(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윤재갑(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의원, 국민 의힘 김형동(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박형수(경상북도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김영선(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강기윤(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윤한홍(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최형두(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정진석(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원과 국립창원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국립안동대·국립공주대 5개 국립대학은 7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역 내 중증 외상, 응급, 만성 질환 환자들이 생존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타지역까지 이동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널리 알리고 의대 정원 증원, 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등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고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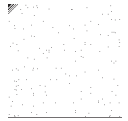
포럼의 1부는 주최한 의원들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공동건의문 채택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300여 명의 참석자들이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외치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역과 지방 없는 중앙은 없다. 국가가 성장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의료체계 개선이 필수”라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최근 지방 의대 정원 합의는 이끌어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와 의과대학 신설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법 등의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요즘 제 별명이 ‘기승전 목포의대’다. 국회의원이 된 뒤 지금까지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꼬집고 권역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재 의원은 “전남의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17곳으로 전국 최다”라고 설명하며 “지역 시민들도 수도권에 사는 시민과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의 건강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방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고 국가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는 6개 시군 크기가 충북보다 크지만 의대가 없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항상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가 늘 고민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늘 포럼을 통해 정부에 국립의
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이날 5개 국립대 총장들은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포럼 2부에서는 김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국립의대 설립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 사망률이 증가하는 통계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 국립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병희 순천대 의과대학설립추진단장은 전남이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중심지이지만 전국에서 사망률 1위, 노령화 1위 지역임을 강조하며 “국립의대 신설이 현실화된다면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공급의 원활화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인구 유출 또

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혁재 안동대 기획처장과 박영호 창원대 기획처장은 각각 ‘안동대 국립의과대학교 유치 추진 결과’와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및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박정희 목포대 의과대학설립추진단장은 ‘지역에서의 의과대학의 역할과 의료현실’을 주제로 지역에서 의과대학의 역할,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된 현실,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심각 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포럼을 준비한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지역에는 타지역 상급종합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을 거두는 환자나 수도권 병원에 가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기차나 버스에서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 언급한 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이며, 앞으로 누구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의료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5개 국립대학은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뜻을 모아주신 국회의원, 지역민들과 함께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윤성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기반 마련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다수의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일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제3조의2)을, 소액보증금 임차인은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제8조)을 가진다.

그런데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도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예컨대,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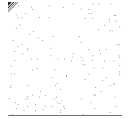
이러한 임차인은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종료되면 해당 주택의 점유를 새로운 소유자인 경락인에게 이전해 주어야 하므로 주거를 상실한다. 따라서 전세사기의 피해자로서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동안 총 7회의 회의(2회의 전체회의 및 5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라 함)을 마련했다.

당초 발의된 3건의 법률안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고 논의 초기에는 여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위원회



야 간 이견도 상당했으나, 국토교통위원회가 치열한 논의와 협상 끝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은 숙의(熟議)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의 유예 등 신청권 부여, 임차주택의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주택의 매입 및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특례,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을 담았다. 다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경매·공매 절차 유예 등 신청권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주거를 잃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세무서장 등에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의결을 거쳐 유예·정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제19조). 다만 경매·공매 절차 이해관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도 필요하므로 최장 1년 동안만 유예·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주택 우선매수권

전세사기피해주택이 경매·공매 절차에 의해 매각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을 제공하고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제20조~제22조). 이 또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이다. 일각에서는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임차인에게 집을 낙찰받아야 하는 부담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낙찰대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지원되는

점, 우선매수권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 유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우선매수권 행사를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제25조제1항·제3항).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제27조제1항), 국가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택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제27조제2항).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제28조). 제28조는 전세사기피해자 등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게 최소한의 생계 여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MQs 방청을 통해 본 영국의 정치문화



김경원
국회 영국 주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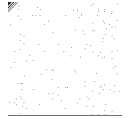
영국 하원에서는 매주 수요일 12시에 30분간 총리(Prime Minister)에 대한 질의(Question)시간을 갖는다. 이를 PMQs(Prime Minister's Questions)라고 한다. PMQs는 1961년 해롤드 맥밀란 총리 때부터 장관에 대한 질의와 별도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¹⁾, 지난 62년간 14명의 총리가 매주 의회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MQs의 특징으로는 ①매주 수요일 12시에 ②국정 전반의 현안에 대해 ③사전질의서 없이 의원의 구두질문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④모든 질의에 총리가 직접 답변한다는 점이 있다. PMQs는 시대 변화에 맞춰 계속 개선되어 왔으며, 1997년 토니 블레어 총리 때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확립된 것으로 평가된다.

PMQs 변경사

변경 내용	시기	총리
총리에 대한 질의 시간 별도 배정	1961년	해롤드 맥밀란
사전 질의서 없는 구두 질문 실시	1975년	해롤드 윌슨
모든 질의에 총리 직접 답변 실시	1979년	마가렛 대처
방송중계 개시	1989년	
제1야당 당수 질문 6개 할당	1993년	존 메이저
화목 오후 3시에 15분씩 → 수요일 3시에 30분간 실시	1997년	토니 블레어
인터넷 생중계 개시	2002년	
수요일 12시에 최소 30분간 실시	2003년	

1) 의회의 대정부질의는 1721년 시작됐다. 1881년 이후 총리에 대한 질의를 당일 의사일정 마지막에 포함시켜 총리가 계속 의회에 있을 필요는 없도록 배려했고, 1953년 고령의 윈스턴 처칠 총리를 배려하기 위해 화, 목 대정부 질의 중 15분간 총리가 오도록 변경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에서 PMQs는 이색적인 정치문화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에서는 총리와 야당 당수의 PMQs 결과를 점수화해서 보도하고 있으며, 미국 케이블 채널인 C-SPAN에서도 PMQs는 주요 인기 프로그램이다. 영국에서는 비판적인 여론과 지지하는 여론이 공존한다. PMQs가 시끄럽고 공격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PMQs를 통해 의회에서 영국의 중요한 이슈가 다뤄진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다.²⁾

PMQs 방청을 위해서는 의원의 초청 필요

영국 의회에서 PMQs 방청을 위해서는 의원의 초청이 필요하다. 영국 주재관으로 온 지 4개월 만에 린지 호일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PMQs를 직접 방청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 날 의사일정 상으로는 15명의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15명의 질의의원과 질의순서는 컴퓨터 추첨(‘shuffle’)으로 정해지고, 제1야당 대표와 제2야당 대표는 질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PMQs의 핵심은 초반의 총리와 제1야당 대표의 질의 응답이다. 이날도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 날인 6월 22일 영국 은행에서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고, 스타머 대표와 리시 수낙 총리는 격론을 벌였다.

현장 분위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당일 질의응답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방청석의 분위기와 당일 언론



At 12 noon
III Oral Questions to the Prime Minister
Q1 Patricia Gibson (North Ayrshire and Arran) If he will list his official engagements for Wednesday 21 June. (905566)
Q2 Mark Menzies (Fylde) (905567)
Q3 Gavin Newlands (Paisley and Renfrewshire North) (905568)
Q4 Dame Meg Hillier (Hackney South and Shoreditch) (905569)
Q5 Philip Davies (Shipley) (905570)
Q6 Kevin Brennan (Cardiff West) (905571)
Q7 Virginia Crosbie (Ynys Môn) (905572)
Q8 Andy Slaughter (Hammersmith) (905573)
Q9 Dr Liam Fox (North Somerset) (905574)
Q10 Anne Marie Morris (Newton Abbot) (905575)
Q11 Danny Kruger (Devizes) (905576)
Q12 Steve McCabe (Birmingham, Selly Oak) (905577)
Q13 Deidre Brock (Edinburgh North and Leith) (905578)
Q14 Kate Kniveton (Burton) (905579)
Q15 Mr David Davis (Haltemprice and Howden) (905580)

PMQs 초청장(위)과 의사일정

의 평가가 비슷했는데, 스타머 대표는 “Tory Mortgage Penalty” 같은 문장을 통해 시선을 집중시킨 반면 수낙 총리의 답변은 논리적이라는 반응이었다.

PMQs의 질의 및 답변은 정중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

2) 2014년 Hansard Society에서 발간한 “Tuned in or Turned off? Public attitudes to Prime Minister’s Questions”에 따르면, 47%가 PMQs가 너무 시끄럽고 공격적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15%는 이에 반대했으며, 40%가 국내의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는 입장이었고, 20%가 이에 반대했다.

PMQs 제1야당 대표와 총리의 금리 관련 질의응답 요약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리시 수낙 영국 총리
보수당 내부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대재앙(Mortgage Catastrophe)이란 의견이 나오는데 동의하는가?	정부는 물가상승률 억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주택담보대출 대재앙은 13년간의 보수당의 경제실패와(트러스 전 총리의) 확장재정(Kamikaze Budget) 때문에 초래. 가구당 담보대출 추가 부담액을 아는가?	세계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부는 담보대출 상황에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 지원 등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가구당 연 2천900파운드가 추가로 부담되는 상황에서 2개월 전부터 정부의 대책을 촉구 중이나 개선이 없음	분명한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와 우리와 비슷한 금리 수준임. 노동당의 정책은 북해유전 신규 투자를 막고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주장을 용인하는 등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들 뿐임
우리 지역에 사는 한 경찰관은 연 5천 파운드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함. 왜 보수당의 정책 실패를 성실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가?	그분에게 노동당 정권이었으면 더욱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것라고 전해주기 바람. IMF도 영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옳다고 함
주택압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가?	주택담보대출 연체 상황은 팬데믹 때보다 나은 상황이고 노동당 정부 때의 1/3 수준임
이런 상황에서도 총리님은 경제적 파괴주의(Economic Vandalism)를 야기한 자들을 상원에 임명하는 계획을 짜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표님이 사소한 정치적 싸움을 거는 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 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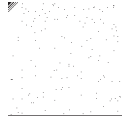
하다. 이 날도 스타머 대표는 질의 중 캘리포니아에 집을 보유 중인 리시 수낙 총리가 캘리포니아 금리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고, 수낙 총리도 답변 중 스타머 대표가 준비된 원고만 그대로 읽고 있다고 했다. 소음 측정 결과 120데시벨까지 올라갔다는 PMQs의 야유와 환호는 이런 발언이 나올 때 더 극심해지고 방청석에까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

토론을 중시하는 영국 문화를 고려할 때 총리 등 정치인의 PMQs에서의 유머러스한 한 마디는 매우 중요하다. 1995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대표는 존 메이저 당시 영국 총리에게 “나는 우리 당을 리드하지만, 당신은 당을 따르는군요”(I lead my party, he follows his)라는 말을 남기는 등 달변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본인의 총리 후반부인 2005년 데이비드 캐머런 보수당 대표에게 “총리는 과거에 갇혀 있지만, 나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 그도 한때는 미래였다”(“It’s only our first exchange and already the prime minister is asking

me the questions! This approach is stuck in the past and I want to talk about the future-he was the future once.”)고 일격을 당하기도 했다. 참고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의 2016년 마지막 PMQs 발언은 “나도 한때는 미래였습니다”(I was the future once)”였고 여야 구분 없이 모두의 환호를 받았다.

이날 PMQs에서는 32분간 34개의 질의가 나왔다. 15명의 사전에 신청한 의원의 질의와 제1야당 대표의 질의 6개, 제2야당 대표의 질의 2개 외에도 호일 하원의장의 호명에 따른 11개의 질의가 더 있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질의 외에도 북아일랜드 문제, 코로나 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직접 본 PMQs는 생동감이 있는 정치였다. 하지만, PMQs의 본질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질문에 대한 내각의 책임 있는 답변에 있는 게 아닐까? 한편, ‘폴리티코’의 PMQs 스코어보드에선 이날 PMQs를 수낙 총리 4점, 스타머 노동당 대표 7점으로 평했다. 🍷



이달의 청원

현재까지 제21대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139건으로 의원소개청원은 72건, 국민동의청원은 67건이었다. 이중 지난 한 달 동안(6월 19일~7월 16일) 접수된 청원은 모두 5건(의원소개청원 2건, 국민동의청원 3건)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안전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아동에게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시설 인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6월 29일 김상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다음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어장에 피해를 주고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결의문 채택 및 오염수 방출 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법 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7월 11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다음 날인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비혼동거를 합법화하

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여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므로 동 법률안 통과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7월 11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다음 날인 7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중국인과 조선족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은 중국 내 한국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으나 한국 내 중국인과 조선족은 투표권을 가져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중국인과 조선족의 투표권을 박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7월 11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해 다음 날인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7월 13일 이태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접수된 청원의 원문 및 위원회 심사정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청원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정리 국회민원지원센터

청원제목	청원자(소개 의원)	소관위	접수일	구분
아동안전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	김성아 외 481인(김상희 의원)	보건복지위	6. 29.	의원소개청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법 제정에 관한 청원	노세극	보건복지위	7. 11.	국민동의청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신효성	법제사법위	7. 11.	국민동의청원
중국인과 조선족 투표권 박탈 요청에 관한 청원	우길영	행정안전위	7. 11.	국민동의청원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청원	정성국(이태규 의원)	교육위	7. 13.	의원소개청원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실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방안 논의

국방위원회, 남수단 한빛부대 방문

국방위원회 한기호(국민의힘) 위원장과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위원(제20대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이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펼치고 있는 남수단재건지원단(한빛부대)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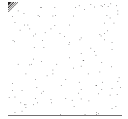
두 위원을 포함한 방문단은 7월 3~7일 한빛부대를 방문하고, 남수단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특별대사 등을 만났다. 국방위원회의 한빛부대 방문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올해 한빛부대 파병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한빛부대 주요 직위자로부터 부대 활동사항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부대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두 위원은 장병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면서 파병부대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약속했다.

방문단은 이후 바르나바 마리아 벤저민 남수단 대통령 비서실장과의도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벤저민 비서실장은 지난 10년간 남수단 재건에 노력해 온 한빛부대에 사의를 표했고, 두 위원은 한빛부대와 교민 안전에 대해 남수단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문단은 남수단 교민행사를 갖고 우리 교민들과 남수단 정세 및 교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을 총괄하는 니콜라스 헤이솜 UNMISS 특별대사와 면담하고, 남수단 재건작전에 한빛부대가 기여하는 역할에 공감했다.

인사청문특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상민)는 7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권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확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구도에서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



의 일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7개 법무법인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여 억 원을 받은 사실이 쟁점이 됐다. 김병욱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로펌 입장에서 권 후보자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건수의 의견서 작성 의뢰를 했다는 건 후보자의 의견서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 연봉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익을 매년 올렸는데,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로펌에 제출한 의견서는 제 정보가 아니라 로펌의 정보이므로 공개하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위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형동 위원(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가. 회피했는가”라고 질의했고, 권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상민)는 7월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재판 당사자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의 정치 편향성 등이 쟁점이 됐다. 정점식 위원(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최기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절제와 품격이 필요한데, 현 대법원장 임기 동안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비난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서 후보자는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큰

규칙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 가족의 비상장주식 투자도 비판을 받았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서 후보자는 이를 모두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들이 “가족의 비상장 주식 부분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자 서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제4차 경쟁 PT 결과보고 청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재호)는 7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부산광역시로부터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보고받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6월 20일 열린 2030세계박람회 제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개최 역량을 알렸다고 평가하면서, 오는 11월 말 최종 개최지 선정까지 남은 기간 동안 회원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득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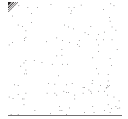
또, 이를 위해 △국가별 교섭 창구로서 재외공관의 예산·인력 보강 △회원국의 현지 동향 파악 및 홍보 활동 강화 △의원외교 역량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및 국가별 전략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위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건설전담조직 신설과 관련,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 △민원 발생 등 보상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한 전담조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통일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논의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태호)의 7월 13일 외교부·통일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방류를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IAEA의 부실 검증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오히려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위원(국민의힘)은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협



의, 한국 전문가의 IAEA 검증 참여 등 3가지 조건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관철했다”며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희 위원(더불어민주당)은 “IAEA 검증 보고서는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IAEA 보고서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편방향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연명·김용하)는 7월 1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 개편:전문성vs대표성’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우창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투자정책은 가치판단의 영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대표성을 갖춘 기구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렇게 확보한 대표성은 기금운용본부가 운용에 집중하고 새로운 자산군과 투자 전략을 도입하는 기반이 되어 수익률 제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며, 국민연금 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신뢰와 대표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행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향후 15년 동안의 투자는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운용위원회는 목표수익률과 허용 위험한도를 정하는 기준포트폴리오(RP)를 제시하고, 자산군별 최적비중을 산출하는 전략적 자산배분(SAA)은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은 기금의 수익과 허용위험 간 배분을 설정하는 의사결정이므로 대표성이 중요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제시해야 하지만, 전략적

자산배분은 다양한 자산군을 운용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수행해야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위원들의 설명이다.

발제가 끝난 뒤 민간자문위원들은 향후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구조의 적절한 개편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산하 2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특위, 네이버 사옥 방문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는 7월 19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 제2사옥을 방문,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특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 제2사옥을 방문, 아크버스 및 하이퍼클로바 등 AI 분야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유의동 위원장과 한무경·홍기원 간사를 비롯해 김한정, 임오경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위원(국민의힘), 양향자 위원(무소속) 등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먼저 네이버 측으로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인 ARC(AI·ROBOT·CLOUD)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디지털트윈 기술 등 다양한 미래 첨단 기술을 테스트하도록 설계된 로봇친화형 건물인 네이버 1784 사옥을 살펴봤다.

이와 함께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현황 및 네이버의 생성형 AI 기술인 하이퍼클로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성형 AI 기술의 중요성, 공공 데이터의 공개·융합·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및 AI 기술 종속 방지 노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국회 전기차 타고 붐뽕~



여섯 살에 한 번 다녀온 국회어린이박물관에 또 가고 싶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1년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기차도 타고 박물관 구경도 하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임은라(서울시 양천구)

NEWS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김진표 국회의장은 7월 16일 국회 사랑채에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60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호와 헌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지고 국민통합에 매진한 제헌국회와 제헌국회의원의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장이 제헌국회의원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은 문희상 전 의장 이후 4년 만이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제헌헌법을 만든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을 만든 산실”이라며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께 제헌헌법의 진가와 이를 만든 제헌국회의원들의 노고를 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선진적인 헌법인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고, 삼권분립의 원칙도 확고하게 세웠으며, 이를 통해 국민 기본권은 물론 토지개혁과 노동3권까지 보장했다”며 “국가 운영의 나침반이자 길잡이인 헌법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제헌의원들 덕에 우리나라가 75년 만에 선진국의 문턱까지, 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내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제헌의원들의 신념을 후배 정치인들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며 “제헌 정신으로 돌아가 제헌 의원들처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내일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정치 분야까지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쳐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후배 정치인들이 제헌국회 선배들의 뜻을 이 시점에서 계승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올바른 길이라는 메시지를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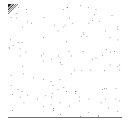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시승식 개최



자율주행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국회는 7월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현대차 김용화 사장(CTO), 김동욱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시승식을 개최했다.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도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방문인과 직원의 편의 증진 및 자율주행차 탑승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까



지 국회 경내 및 둔치주차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도로환경 개선작업 및 시범운행을 실시한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주행 로보셔틀에 탑승해 자율주행차의 첨단기술 및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대자동차와 포티투닷(42dot) 연구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 핵심사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도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와 결합되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 완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있는 등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인 국회에서 완벽하게 성공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운행시 보행자 등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운행을 시작하는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은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기반에 포티투닷(42dot)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TAP!' (탭)을 접목한 것으로, 레벨4 자율주행차는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제어하는 등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7월 5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로보셔틀(10인승)은 국회 경내와 둔치주차장을 잇는 3.1km 구간을 수요응답형 기반으로 순환 운행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를 탑승하려면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I)을 설치하면 된다.

국회사무처는 내년에는 운행노선 추가를 통해 서비스 대상지역을 '국회-여의도역' 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19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열려



대한민국 국회는 7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9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개최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다수결의 원칙, 소수 의견의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한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와 민주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4년 만에 상임위원회, 본회의 및 시상식 등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어린이국회에는 전국에서 62개 초등학교의 어린이국회연구회 어린이의원 및 지도교사 등 172명이 참석했다.

앞서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는 91건의 법률안과 46건의 질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지난 6월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원회'에서 17건의 우수법률안과 5건의 우수질문서를 선정했다.

이번 어린이국회는 3개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본회의,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고 본회의에서는 7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국회사무처는 어린이들이 공동체의 관심사에 문제의식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어린이국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회 법제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6호)’ 발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23년 6월 29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2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6월 29일 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일 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나목 중 위 해 당 부분과 ②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 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제3항제1호 아목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해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 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2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 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 원회 소관 법률 18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 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 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 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6호)’의 자세한 내용은 국 회사무처 홈페이지>정보마당>법제정보(<https://nas.nago.kr/>

[nas/info/legislation_info01.do](https://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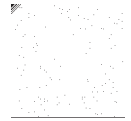


국회사무처는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 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및 한국공 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 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 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 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과 실 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 국 반열에 올려놓는 기반이 됐으나, 대통령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졌다”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 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고 역 설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의 개헌 시도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 니 실패했다”며 “국민과 정치권이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



는 내용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개헌 추진을 위해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주제인 ‘개헌의 필요성-지금 왜 개헌이 중요한가’에 대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제2주제인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의 발제에 이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승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강재호 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방향과 개헌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등 개헌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를 토대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이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개헌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은 7월 13일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

를 주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챗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미국 서퍽 로스쿨 학장이자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앤드류 펄먼 교수와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서비스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생성형 AI와 법률의 미래’를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관련 법제 논의 현황, 독일의 입법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제2세션에서는 ‘챗GPT와 법률번역’을 주제로 챗GPT를 활용한 법률번역 사례 및 기술적인 측면을 소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과 도전과제에 대해 “현재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는 인간의 창의적 영역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인공지능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우리나라가 ‘패스트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법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혁신의 수단이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에 따른 잠재력과 영향력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7월 13일부터 ‘지능형 법률검색’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능형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장형 질문에 대해 답변과 관련 법률 내용을 조문 단위로 제공

NEWS

하는 질의응답 시스템이다. 세계의 헌법, 국회 관계 법규, 공공·행정 관련 법률 등 약 11만 건의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있는 '지능형 법률검색' 서비스는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ARGO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회에산정책처, NABO Focus(제60호)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 발간



국회에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7일 기초연금의 소비증진효과를 살펴본 NABO Focus(제60호)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를 발간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만65세 이상인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 기준

여액은 32만3,180원이며, 재정지출예산은 22.6조 원(국비 18.5조 원+지방비 4.1조 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노인가구의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을 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곱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2021년 기초연금 지급액 18.9조 원의 약 71.7%인 13.5조 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연금은 정부의 경상이전 지출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여력 확대를 통해 민간소비지출로 이어져 GDP를 증대시키고 향후 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소득 하위 노인가구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된 점은 소비지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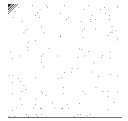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월 10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방안과 과제'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공동주최자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마음을 전했다.

세미나는 크게 주제 발표와 라운드테이블의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 첫 번째 발표는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정부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쟁점과 필요한 검토사항들을 정리했다.

두 번째 발표는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을 주제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들을 정리하고, 그 수행주체로 국회입법조사처를 제안했다.

제2세션 라운드테이블은 최근의 입법 홍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좌장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의 지적으로 시작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간의 '특별법 공화국' 표현을 언급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바



라는 희망을 밝혔고, 심우민 경인교육대 교수는 가치별로 제시되고 있는 논거를 정리하고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 또한 입법영향분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유의사항들을 정리했고, 노혜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은 정부 규제영향과 비교해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수행주체의 요건, 절차 등을 조언했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률의 준수비용과 사회 총비용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계량적 분석이 어려운 외교안보정책과 같은 영역에도 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세미나에 모인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함께 하면서, 관련 내용에 관한 세부적 논의들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의원발의 법률안 입법영향분석제도의 쟁점이 더욱 구체화돼 차후 제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미래연구원,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7월 13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외교가 곧 경제이자 안보이며 외교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가치외교와 실리외교는 외교의 두 축”이라며, “격량의 파도가 높을수록 목숨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되 가치를 기반으로 국익을 향해 가야 한다”면서, “미국과



는 가치기반의 동맹관계를, 중국과는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친선관계를 고려해 국회가 의미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최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의회가 반드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문제의 해외 이슈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축사를 통해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오염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중심을 잡아준 김진표 의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홍영표 의원(한중의원연맹 회장)은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국익외교”라면서 “한중의원연맹이 함께 만나서 한중관계의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외에 김영진, 박병석, 양정숙, 이은주, 이인선, 한정애, 허은아, 홍정민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속기관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NEWS

국회의장실 인사



조경호 의장비서실장(차관급)

-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경기도 연정협력관, 한국일보 기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김재준 공보수석비서관

- 국회의장 언론비서관, 청와대 춘추관장,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국회 사무처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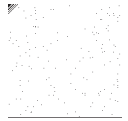
권영진 입법차장(차관급)

- 경희대 무역학 학사, 경희대 행정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의사국 의안·의사담당·의사과장, 농해수위·운영위 입법조사관, 국회운영위 행정실장·입법심의관, 기재위 전문위원, 의사국장, 국회운영위·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사무차장(차관급)

- 한양대 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루이스앤클락로스쿨 법학박사, 미국 변호사(뉴욕주)
- 입법고시 13회, 법사위·과기정위·국토위·산업위 입법조사관, 회계과장, 운영지원과장, 뉴욕 입법관, 예결특위 입법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국제국장, 산자위·법사위 전문위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국회입법차장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이화여대 영문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 경제학 석사
- 입법고시 13회, 환노위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여가위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KDI국제정책대학원 석사
- 문체위 입법조사관, 예산정책처 사회사업평가팀장,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여가위 전문위원, 의정연수원장,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고려대 행정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행정학 석사
- 입법고시 13회, 공보관실 홍보담당관, 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장, 기재위 입법조사관,

기재위 입법조사관, 미국(워싱턴) 주재관, 행안위·복지위·기재위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대 정책학 석사, 경남대 정치학 박사(수료)
- 입법고시 15회, 기초실 기획1담당, 미디어담당관, 법제실 행정법제과장, 입법조사처 정치심의관, 헌정회 사무차장, 정무위 전문위원, 환노위 전문위원

이신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강대 경제학과, 미국 머레이주립대학 교육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법사위·재경위·농해수위 입법조사관, 관리과장, 예결특위 입법심의관, 입법

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국방위 전문위원, 예결특위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박희석 법제실장(관리관)



- 고려대 서어서문학 학사, 미국 콜롬비아대 도시계획학 석사, 고려대 도시계획 박사(수료)
- 입법고시 14회, 건교위 입법조사관,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미국(뉴욕) 주재관, 예결위 심의관, 국토위 전문위원, 국제국장, 문체위 전문위원

박재유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고려대 무역과, 고려대 행정법 석사, 박사 수료
- 입법고시 13회, 법제예산실 예산정책 입법조사관, 문광위 입법조사관,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인사과장, 국회운영위 입법심의관, 입법조사처 기획관

리관, 국제국장, 교육위 전문위원, 법제실장

이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확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 1. 2021. 8. 17. 일부개정]

식품 등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제도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제도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95%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으며, 96%는 식중독 등의 불안감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고 있었다. 소비기한 제도는 식품의 조기 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식품산업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소비기한 제도의 내용과 기대사항 등을 알아봤다.

식품의 조기 폐기 막기 위해 ‘소비기한’ 도입

우리나라는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전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해 왔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제품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일정 기한 소비가 가능하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 이유에 대해 김태경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기존의 유통기한은 영업자의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즉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다. 소비자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대해 섭취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고,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많은 식품들을 폐기해 왔다. 반면,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식품 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U,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소비기한을 도입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2018년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의 시행에 따라 소비기한은 올해 초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포장재 등 자원 낭비 방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올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돼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은 혼재돼 판매되고 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그 의미가 달라 소비자는 표시된 날짜가 소비기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낙농·유업계의 현실을 고



려해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38년간 이어져온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나도 소비자는 먹어서는 안될 식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설정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두부 17일→23일, 햄 38일→57일, 발효유 18일→32일 등으로 기존 유통기한보다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연간 1조 원의 비용편익 기대

우리나라의 식품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 처리비용은 1조96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후 식품폐기 비용이 소비자는 연간 8천860억 원, 산업체는 연간 26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산업체 편익 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산업체 폐기물 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약 1조 원의 비용편익이 예상된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뀔에 따라 유통기한의 표시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대상에 해당된다. 소비기한의 설정 주체는 식품 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이다.

날짜 표시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같다.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세트포장 제품의 경우, 구성 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 위반에 대한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음료 등 상품들이 진열돼 있다.

행정처분은 현행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소비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기한보다 초과한 경우, 소비기한을 변조한 경우 등에는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올해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면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폐기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국제적 추세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생산 식품의 수출경쟁력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세영업자의 설정 부담 등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25년까지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200개 식품유형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

글 고영선



국회 본회의, 법률안 87건 의결

국회는 6월 30일 본회의(제407회(임시회) 제7차)를 열고 법률안 36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등 스마트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제입양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어 7월 18일 열린 제40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정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법률안 51건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가 지체 없이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

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및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개정법에 의하면 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은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한편 개정법은 의료기관 밖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로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정보를 장내과



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익 또는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수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정하는 진술 또는 증언 등과 관련하여 처벌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그 형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등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등을 새로 규정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와, 스마트농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제입양’을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입양’ 및 ‘외국에서 국내로의 입양’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그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돼야 하고,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중앙당국을 보건복지부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외국 중앙당국과 협의해 입양을 진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수령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기관을 주체로 국제입양이 진행되도록 입양 절차를 규정했다.

한편, 제정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양부모로부터 입양을 신청받고 상담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법은 필요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도록 의무화해,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통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제

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해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첨단산업 공급망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지체 없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기존의 첨단전략산업기술조정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하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략기술보유자의 전략산업 등 관련 설비투자 또는 기술개발 사업이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설비 구축, 신속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은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개정됐다.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숙련기술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국가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도록 했다.

영아살해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형법’은 존속 살인·유기죄는 일반적인 살인·유기죄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면서, 영아살해·유기죄의 경우는 오히려 더 낮은 최고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영아를 보호해야 할 직계존속이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살인·유기보다 오히려 감경해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각각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CCTV 기록을 훼손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법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해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어린이집 CCTV(폐쇄회로)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있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 9044 판결)에 따르면,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 채용비리로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등의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이 의결

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 후 편입이 취소된 경우, 편입취소 이전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전문연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될 경우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해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편입 당시부터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편입취소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인정받는 것은 투명한 병역 이행 문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의 복무기간을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서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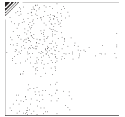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 안전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제입양,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합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2022-12-09 의결
본회의 2023-06-30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지구적 공급망의 재구성



인터넷 초기에는 경제와 사회가 시스템화된 고객관리, 투명한 자원관리 및 철저한 공급망 관리가 가능한 세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객관리 시스템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은 영업사원이 교체되거나 노사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알아내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영업관리 시스템이 개발돼 고객의 생체 인식만으로도 고객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자원관리 시스템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투명하게 관리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도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정기적인 재정 건전성 평가를 받게 됐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서의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의 재무 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불리는 ERP를 도입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면 기업 차원에서 인수합병이나 다양한 방법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믿을 만한 기업이 되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20년 이상 발전되어 왔지만, 공급망 관리라고 불리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은 국가나 국민적 관심에서는 다소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2022년 대중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붕괴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원자재 부족이 발생하면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간 공급망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미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재료 부족이 발생한 경험과 지구 한편의 전쟁이 초래한 각종 물자 부족은 물가 상승을 부추겨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겪으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공급망 관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들이 어떤 경로로 도입되고, 유사시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물자의 공급망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세상이 도래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 행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교육 공급망도 변화하고 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2006년에 출간한 ‘부의 미래’에서 정치와 법이 가장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다음으로 변하지 않을 것은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전 세계 학생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도록 변화시켰다. 등교라는 개념은 학교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일부 수업을 이러한 비대면 수업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유통에서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매할 때 신선도, 첨가물, 포장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만, 유통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상품이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산란 후 10명이 만진 계란을 살 것인가, 아니면 5명만 만진 계란을 살 것인가? 결국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중간 유통 과정이 없거나 최소화된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과정의 단축으로 도소매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배달업이나 생산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공급망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은 종종 자국민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배포, 미국의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등에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일상적으로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글 김동철 공학박사



“국회의 모든 활동, 카메라에 담아 ‘역사’로 남기죠”



임진완 주무관
공보기획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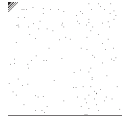
Q. 국회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는지, 어떤 계기로 국회에서 일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 2008년 가을 즈음, 재학 중이던 대학 과사무실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수필집 사진을 도와줄 사진작가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아르바이트였는데 마침 제 전공이 다큐멘터리·보도 사진이었고 졸업을 앞두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국회라는 기관의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당시 의장실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욕구가 생겼습니다.

운이 좋게도 같은 해 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고 그 뒤 전문임기제 등 몇 번의 시험과 면접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Q. 공보관실 사진팀에서 하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사진팀은 국회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 입법활동 홍보 등 국회사무처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 지원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단 동정, 의사회의, 의회 외교행사, 국회 내부 행사 촬영 등 국회사무처가 하고 있는 상당수의 일에 저희 사진팀이 촬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국회보의 인터뷰 사진들 또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사진 업무 담당자들은 기관장의 전속 사진기자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국회 촬영관은 업무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물이 아닌 국회라는 기관 전체의 전속이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국회에서 촬영관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언제이고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A. 국회는 국민의 대표 회의체 기관이다 보니 다루는 분야도 광범위하고 활동도 다양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수가 26개나 됩니다. 물론 26개 위원회가 동시에 열린진 않지만 그만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할 빈도와 횟수가 많습니다. 또한 현장시찰의 경우도 하루는 산업분야, 그다음 날은 노동현장, 때로는 군부대 등 국회의장단 혹은 상임위의 활동과 요청에 따라 다양한 곳을 촬영합니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국회의 활동 현장을 다니다 보면 체력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무릎이나 허리 등에 고질적인 직업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현안의 현장에서 국회의 활동을 기록하고, 저희가 촬영한 사진들이 2차·3차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 매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Q. 촬영을 하면서 기억나는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A. 입사 초기 모 의장님과 본관 앞 잔디밭 광장을 지나던 중 의장님께서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우셨습니다. 수행팀과 경호팀이 같이 이동중이긴 했지만 가장 지근거리에 있던 제가 손을 뻗어 쓰레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쓰레기를 받아 들 것이 아니고 주우시는 장면을 찍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물론 지금의 저라면 카메라를 들었을 겁니다.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직무는 촬영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국회 재직 기간 동안 여러 경험을 했는데요. 좋은 사진을 찍어보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뛰어다녔던 2011년 G20 서울 국회의장회의, 조교로 복무했던 군 시

절을 떠올리게 한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사건, 그리고 2016년 교대로 며칠 밤을 새우며 촬영한 192시간의 필리버스터가 기억이 납니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철야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촬영을 했는데, 저 또한 사람인지라 깜빡 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교대에 맞춰 눈이 떠지는 직업의식이 발휘됐고 무사히 모든 의원님들을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국회에서 사진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만큼 조금은 독특하고 생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굳이 명명하자면 정치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표정, 좋은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 사진의 기본 원리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국회의 촬영관으로서 입법활동, 정치활동의 모습을 담백하게 기록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진이 아닌 ‘정치하는’ 사진을 찍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올해 사진팀에서는 촬영이라는 1차 업무를 넘어 결과물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사진자료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아직은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속기록을 찾아보듯 과거의 사례를 이미지로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으며, 각 의원실과 국회 내 부서에서 입법활동의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의의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내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 자료 시스템이 더욱 빛을 발하리라 기대됩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에너지 세계사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인류의 치열한 도전과 경쟁

“과학자들이 설명했듯이, 400ppm 초과는 우리들 다수가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에너지 공급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초래한 사태이며, 지구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바꾸어야 한다.” - 3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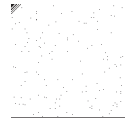
최근 세계기상기구(WMO)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전보다 1.5℃ 이상 오르지 않게 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WMO는 앞으로 5년(2023~2027년) 이내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5℃ 이상 올라갈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의 결의가 8년 만에 무색해진 상황이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홍수와 태풍, 가뭄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200만 명 이상이 숨지고 경제적 피해가 4조3천 억 달러(약 5천6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WMO는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해 극한적 날씨가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5년 안에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더위가 닥쳐올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인류는 산업혁명 시대의 석탄부터 20세기 초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석유, 최근의 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화석연료에 의존적인 체계를 만들어왔다. 화석연료 덕분에 인류는 전기와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풍요를 누렸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동등한 에너지를 누리진 못했다. 석유 등 에너지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대립은 ‘걸프전’ 등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



저 자 브라이언 블랙
역 자 노태복
출판사 씨마스21
출판일 2023. 4.



기도 했다.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의 여파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유럽연합(EU)과 러시아 사이에 천연가스를 둘러싼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도가 높았던 EU는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으로 지난 1년 동안 비상사태를 경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통한 에너지 안보 향상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방안 마련을 위해 ‘REPowerEU Plan’을 발표했다. REPowerEU는 천연가스(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효율화 목표를 더욱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에너지효율지침에서 규정했던 2030년 에너지소비 9% 감축(2020년 기준 예측치 대비) 의무를 13%로 확대했고,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른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40%에서 45%로 상향했다.

지난해 미국은 단일 법안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입법안으로 평가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했다. 총투자 4천370억 달러(약 527조 원) 중 84.4%에 이르는 3천690억 달러(약 454조 원)의 예산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 편성했다. 중장기 미국 내 친환경 산업 관련 제조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밸류체인을

확보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국 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이처럼 그린뉴딜 정책을 확장하면서 ‘탄소무역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지만 세계에서 10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다. 전기 소비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소비 상위 10개국의 1인당 소비량을 비교하면, 한국은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4위, 1인당 전력 소비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은 2020년 기준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다. 독일(43.6%), 영국(43.1%), 이탈리아(41.5%) 등 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19.7%), 일본(19%)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져 있다.

이 책은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세계가 이미 우리 눈앞에 있으며, 각 국가의 선택이 곧 인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류는 에너지로 연결된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미래를 전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미래를 보듯 ‘에너지 세계사’를 통해 에너지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

글 권승문(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종신토록 읽어야 할 정약용의 ‘논어고금주’



‘공자(孔子:BC551~479)는 예수(BC4~AD30)보다 550년 전에 태어났다. 공자의 대표적인 저서는 ‘논어’이고 예수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후세에 전했다. 공자의 ‘논어’는 동양 사상의 원류였고 ‘성경’은 서양 사상의 기조였다. 논어와 성경은 시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고 풀이를 달리하면서 시대의 대표적인 학문이자 사상으로 행세했다. 서양의 성경은 보편화된 책이어서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논어에 대해서는 동양사람으로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 논어는 유교의 바이블이기 때문에 유교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논어에 대한 언급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유교의 경전으로 13경(十三經)을 거론하는데, 공자보다 1681년 뒤에 태어난 송나라의 주자(朱子:1130~1200)에 의해 유교가 신유학(新儒學)으로 변모하면서 논어는 사서(四書)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주자에 의해 ‘논어집주(論語集註)’로 편집되어 모

든 경서의 왕좌에 위치하게 됐다. 주자는 경학자이자 성리학자로 공자와 맹자의 모든 경서들을 성리학적으로 해석해 관념적인 중세 이론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동양 12세기 학문은 주로 주자의 경학 이론에 따르면서 유학이 정리되자 그 이후의 학문 주조는 ‘주자학’이 되어 동양 사상의 주류를 형성했다.

주자보다 630여 년 뒤에 태어난 다산 정약용(1762~1836)은 19세기의 학자로 12세기 학자 주자의 경전 해석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자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룩된 ‘다산학’의 관점으로 경전을 다시 해석하면서 성리학적 해석을 실학적 관점으로 해석해 다산경학의 세계를 열었다. 주자의 ‘논어집주’를 다산의 ‘논어고금주’라는 40권의 저서를 통해 원본 공자의 ‘논어’를 새롭게 해석해냈다. 다산은 그렇게 해석해야만 공자의 본래 뜻이 제대로 읽힌다고 여겼다. 다산은 주자의 해석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면 대체로 그대로 따랐지만 자



신의 생각과 다른 주자의 해석에는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보충해서 새롭게 넣었다. 주자학에서 다산학으로의 이행이 그렇게 해서 이룩되고 있었다.

다산은 ‘논어’에 대해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경학 연구서 중에서도 유독 정성을 바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주자의 집주에서 175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관념적이고 선협적인 주자학의 경전해석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다. 행위와 실천에 연결되지 않은 경전 해석을 행위와 실천에 부합하지 않으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주자학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공자의 유학사상의 중심은 인(仁)에 있다. 논어의 중심 사상은 그래서 인(仁)이다. 공자는 ‘인(仁)이란 인(人)이다’라고 해석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해석은 하지 않았다. 주자는 ‘인(仁)이란 사랑의 이치(愛之理), 마음의 덕(心之德)’이라고 해석하여 인이 이치(理)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仁)뿐만 아니라 ‘인의예지(仁禮義智)’ 모두가 이치(理)라고 해석한다. 여기에 다산은 반대하여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행사(行事)에서 이룩되는 것이지 마음속의 이치가 아니다(非在心之理)’라고 생각했다. 주자학과는 여기서 차이가 나고 있다. 다산은 이치라는 개념의 세계를 행사, 행위와 같은 실천의 결과로 얻어지는 명칭이라는 경험적인 해석을 내린다.

‘논어고금주’의 논어 해석이 실학적이라는 대표적인 예를 보자. ‘인(仁)이란 두 사람이 서로 관여하는 것이다(仁者二人相與也). 효도로 어버이를 섬기면 인이 되니 아버지와 아들이 두 사람이다. 형을 섬기기를 공손하게 하면 인이 되니 형과 아우는 두 사람이다. 임금과 신하, 목민관과 백성, 남편과 아내, 붕우(朋友)등 모두가 두 사람 관계이니, 두 사람 관계에서 자신이 행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凡二人之間盡其道) 모두 인이다(皆仁也)’라

고 하여 마음속의 이치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행위가 바로 인이라는 독특한 해석을 내렸다.

‘육경이나 여러 성현의 글도 모두 읽어야 하지만 특히 논어만은 종신토록 읽어야 한다(六經諸聖書皆可讀唯論語可以終身讀(용혜관에게 주는 글).’ 이렇게 중요한 책이 논어인데 경전의 뜻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세상이 밝아지지 못한다고 다산은 생각했다.

‘경전의 뜻이 밝혀진 뒤에야 ‘도’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도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심술이 바르게 되고, 심술이 바르게 된 뒤에야 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경학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정수철에게 주는 글)’ 잘못된 경전 해석으로 덕을 이루지 못하니 인간이나 나라가 제대로 되어가겠느냐는 뜻에서 다산은 생애를 걸고 경학 연구에 온 정성을 바쳐 232권의 경학연구서를 편찬했다. ‘논어고금주’ 40권, 뒤뜰린 세상을 바로잡고 망해가는 나라를 구제하려는 뜻에서 온갖 정성과 노력을 바쳐 거대한 논어 해석을 새롭게 해냈다. 12세기의 주자해석이 아니라 19세기 다산의 해석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지(經旨)가 밝혀지지 않는 한, 절대로 올바른 세상은 올 수 없다는 다산의 확신, 그런 확신에서 세상을 바로잡을 ‘논어고금주’를 완성한 사람이 다산이다.

‘논어’ 원본을 읽어야 하지만 집주나 고금주를 읽지 않고는 원문의 경전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논어를 읽으려면 우리의 고전, 다산의 ‘논어고금주’를 읽어야 한다. 방대한 책, 다행히 ‘역주논어고금주’(이지형 역주)라는 한글 번역본이 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번역도 제대로 했다. 중세를 벗어날 논리로 주를 낸, 다산의 책을 읽는 일이 우리 모두의 의무가 아닐까. 인을 행하여 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

글 박석무(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제헌국회부터 제21대국회까지 개원식 식순

주악(奏樂), 봉창(奉唱), 식사(式辭)¹⁾는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최초의 개원식 식순 중 한 부분이다. 국회의원 198인 모두 출석한 제헌국회 제1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회법과 국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하는 국회임시준칙을 의결했는데 결의안 본문 끝에 국회 개회식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최초 개원식이 열린 1948년 5월 31일은 최초 대통령 선거일(1948. 7. 20.) 이전이라 식순에 대통령 치사 대신 UN대표 등의 축사가 포함됐다. 아쉽게도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최초 집회일을 기념하는 제헌국회 개원식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속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제헌국회 제1회 제1차(1948.5.31.) 본회의>

3. 국회임시준칙결정의건

○임시의장 이승만 지금은 이 조문을 축조해서 한 조문식 한 조문식……

(……)

「제9조, 국회 개회식은 단기4281년5월3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할 것.

1. 개회식 절차는 좌에 의할 것
- 一. 주악(송구여지곡)
- 二. 개회
- 三. 애국가 봉창(구왕궁아악부·국민학교 아동 합창)
- 四. 국기에 향하여 경례
- 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六. 식사(의장)
- 七. 선서식(선서문 낭독)
- 八. 축사

1) 주악(奏樂)-음악을 연주함. 봉창(奉唱)-경건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름.
식사(式辭)-주최자가 인사로 하는 말.

1. UN 대표
2. 하지 중장
3. 띤 군정장관
- 九. 주악(만파정식지곡)
- 十. 만세삼창(의장)
- 十一. 폐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공포할 것은 유안(留案)된 몇 조문을 내놓고 다 접수된 것이니까 그대로 등록하시요.

(……)

○의장 이승만 오늘은 이제부터 40분쯤 쉬고 2시에 모여야 합니다. 손님들이 오시고 그럴 터이니 할 수 있는 대로 점심을 속히 잡으시고 2시 전에 모여서 실례가 안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오 1시20분 휴회)

제헌국회 제2회부터는 회기를 시작할 때 개회식이 따로 진행됐고 제3회 개회식부터 식순에 대통령 치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대통령 치사는 제13대 개원식 이후부터 대통령 연설로 식순명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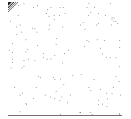
제2대국회를 시작하면서 개회식 행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산회한 후 이어서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제7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내용에 들어 있다.

<제2대국회 제7회 제1차(1950.6.19.) 본회의>

○임시의장 오하영 국회법에 제정한 바에 의해서 외람하게도 의장·부의장을 선거하는데 본 의원이 임시의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장 신익희 이번에 제2회 국회에서 이 불초 무사한 사람을 다시 의장으로 선거해 주신 일은 개인 일신의 한이 없는 영광인 데는 틀림이 없지마는 앞으로 많은 여러 가지의 중대한 임무를 우리 삼천만



이 부탁해 준 바에 틀림이 없이 잘해 나갈까 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
각으로 공구(恐懼)한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하오 3시55분 산회)

(하오 4시 개회)

○사무총장 이수선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악

애국가 봉창

국가에 대하여 경례

식사(의장)

치사(대통령)

국회 개원식의 사전적 의미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
초의 임시회 집회일에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실시하는 개회식을 뜻한다. 개회식²⁾은 정기회 및 임시
회의 집회일에 국회의 회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실시하
는 행사이다. 국회는 국회법³⁾에 따라 개회식을 실시하
는데 대(代)가 바뀌면 개원식 겸 개회식, 일반적인 해에
는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 때 개회식을 실시하고
있다.

개원식 사회는 사무총장(2·3대)을 시작으로 의사국
장(4·5대), 총무국장(6대), 섭외실장(7·8·9대), 섭외국장
(10·11·12·14대), 의전과장(13대)을 거쳐 제15대부터 현
재까지 국제국장이 맡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⁴⁾

<제14대국회 제157회 개회식(1992.6.29.)>

제157회국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1. 국회의원 선서

1. 개회사

1. 대통령 연설

1. 폐식

(14시 개식)

○섭외국장 이재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57회국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21대국회 제380회 개회식(2020.7.16.)>

제21대국회 개원식 겸 제380회국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국회의원 선서

1. 국회의장 개회사

1. 대통령 연설

1. 폐식

(14시00분 개식)

○국제국장 박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개원식 행사 중 애국가 제창
및 선서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헌국회 개원식부터 제21대국회 개원식까지 식순과
내용에 큰 차이는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
가를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고, 의원 선서
가 있는 후 의장의 개회사와 대통령 연설로 이어지는 식
순은 표현만 다를 뿐 거의 같다. 다만 제6대국회 제45회
(1964. 9. 1.) 개회식까지는 마지막 순서에 만세 삼창이
있어서 부의장의 선창으로 힘차게 만세 삼창을 한 후 개
회식을 마쳤다.

올해로 국회 개원 75주년을 맞았고, 2024년에는 제
22대국회가 새롭게 열린다. 개원 100주년의 모습은 어
떨지 사뭇 궁금해진다. 🍵

글 김경재 속기사무관(의사국 의정기록2과)

2) 개회식은 회의가 아니므로 본회의 차수에 산입하지 않음.

3) 국회법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
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4)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일에 실시하는 개회식 사회는 의사국장이 진행.

첨첨산중 오지, ‘무진장(茂鎭長)’의 보배창고

진안고원 마이산





말 귀를 쏘 빼놓은 마이산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무진장(無盡藏)’이라는 말이 있다. ‘아주’, ‘엄청나게’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아무리 꺼내어 써도 다함이 없는 풍요로움이 끊이지 않는 보배창고’라는 의미로, 불교에서 유래했다.

이 무진장은 지명으로도 쓰이는데, 뜻은 전혀 다르다. 전북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의 앞 글자만 따서 ‘무진장(茂鎭長)’이라고 부른다. 이 세 지역은 전북에서 가장 내륙 지방이고 산세가 험한 데다 사람의 접근이 힘들어 예로부터 무진장이라 불리며 첩첩산중 오지의 대명사로 통한다.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무진장 일대가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해발 500m의 진안고원에 자리한 덕분에 오지의 대명사가 아닌 공기가 쾌적하고 시원한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다. 오지라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지라서 더 찾아오는 시대가 됐다. 그야말로 ‘무진장(茂鎭長)’에서 ‘무진장(無盡藏)’이 된 셈이다.

청정 여행지로 각광받는 진안고원에 방점을 하나 찍어보자면 무진장의 ‘보배창고’ 마이산(馬耳山, 687m)이 아닐까 싶다. 우뚝 솟은 두 봉우리가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은 그 산세나 지형이 ‘무진장’ 신비로울뿐더러 이상하고 기묘하다. 덕분에 오지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마이산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도 전국의 많은 산을 다녀봤지만 마이산처럼 신통방통한 산을 만난 적이 없다.

소문은 해외까지 났다. 세계 최고 권위의 여행안내서인 ‘미슐랭그린가이드’에 소개되면서 만점인 별 3개를 받았다. 한국의 대표 산인 설악산과 지리산이 별 2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사건이었다. 비록 규모가 작아 도립공원에 머물러 있지만, 마이산이 품은 기세와 풍광, 신비감 등은 세계 어느 명산에 뒤지지 않는다.

뚝대봉, 용각봉, 문필봉 그리고 마이산

멀리서 마이산을 보면 진안고원 위로 느닷없이 말 귀를 닮은 거대한 바위 두 덩어리가 솟아 있으니 누구라도 감탄을 금치 못한다. 두 봉우리 중에서 동쪽 귀가 솟마이산, 서쪽 귀는 암마이산이다. 지금은 마이산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졌지만, 예전에는 두 봉우리가 철따라 빗어내는 풍경이 달라 계절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봄에는 안개를 뚫고 나온 두 봉우리가 쌍뚝배 같다고 해서 뚝대봉, 여름에는 울창한 수목이 용의 뿔처럼 보인다고 해서 용각봉이다. 가을에는 풍긋한 말의 귀 같다고 해서 마이산, 겨울에는 산봉우리에 눈이 쌓이지 않아 먹물을 찍은 붓끝처럼 보인다고 해서 문필봉이다.

마이산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주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능선을 타고 산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령면 합미산성에서 출발하는 종주코스(12km)는 광대봉~고금당~나봉암~삿갓봉~봉두봉~암마이봉~탐사~남부주차장으로 이어지며 5시간 넘게 걸리는 긴 코스다. 마이산의 숨겨진 비경들을 모두 볼 수 있지만 다소 숨이 차다.

부담스러운 종주코스보다는 마이산 주변 능선을 따라 암마이봉에 오르는 핵심코스(8.3km)를 많이 찾는다. 마이산도립공원 남부주차장을 들머리로 해서 고금당~비룡대~암마이봉~탐사를 거쳐 다시 출발 지점으로 내려오는 회귀 코스다. 능선 조망도 즐기면서 3~4시간에 마이산의 정수를 모두 담을 수 있다.

남부주차장에서 매표소를 지나 왼쪽으로 숲길을 따라 20여 분 오르면 황금지봉의 고금당에 다다른다. 이곳엔 고려 말 고승 나옹선사의 수도처였다고 전해지는 자연암굴인 나옹암이 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 놓고/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옹선사가 읊었던

시가 들리는 듯하다.

나옹암을 뒤로하고 30여 분 발품을 팔면 바위 위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지었다는 누각 비룡대에 오를 수 있다. 이곳에 서면 사방의 전망이 발 아래 펼쳐진다. 마이산 암마이봉 솟마이봉이 지척으로 다가서고 봉우리 네 개가 차례로 이어진 삿갓봉도 눈에 들어온다. 아스라한 진안의 너른 들판과 섬진강의 푸른 물줄기가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고원의 바람에 가슴이 후련하다.

1억 년 전 비밀 품은 신비의 쌍봉우리

능선을 따라 숲길을 1시간 정도 가면 봉두봉을 지나 암마이봉에 다다르게 된다. 암마이봉은 멀리서 봤을 땐 깊은 숲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니 거대한 바윗덩어리 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바위와는 사뭇 다르다. 폭격을 맞은 듯 중간중간에 벌집 모양의 큰 구멍이 승승 뚫려있다. 마치 달 표면의 분화구를 연상시킨다.

신비로운 마이산의 비밀은 여기에 있다. 마이산이 형성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의 일이다. 거대한 호수였던 곳이 땅이 솟아오르면서 자갈과 모래, 진흙이 섞여 서서히 딱딱해져서 암석이 됐다. 지질학적으로 진귀한 ‘타포니(풍화혈)’ 지형이라고 하는데, 마이산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암마이봉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해 한동안 오를 수 없었지만, 이후 등산로를 재단장하고 산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정상까지 짧지만, 급경사를 올라야 하므로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한다. 정상 전망대에 서면 솟마이봉이 코앞에 다가오고 그 너머로 남덕유산과 장안산 능선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암마이봉과 마주한 솟마이봉은 원체 가파른 바위봉이라 오르는 코스가 없다.



암마이봉



답사의 신비로운 돌탑들

암마이봉과 숫마이봉 사이 천왕문을 지나면 하산길이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은수사가 나타난다. 은수사는 한겨울에 그릇에 물을 떠놓으면 얼음기둥이 생겨나는 역고드름으로 유명하다. 고드름의 길이는 35cm까지 자라는데, 국내에서는 마이산에서만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이다. 우뚝 솟은 두 마이봉 사이에서 생긴 급격한 공기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 공기가 위로 빨려 올라가면서 역고드름이 생긴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자연 현상이 신기할 따름이다.

은수사에서 다시 200m쯤 더 내려가면 돌탑으로 유명한 답사가 나타난다. 암마이봉과 숫마이봉 사이에 들어앉은 답사에는 약 80기의 돌탑이 세워져 있다. 얇은땀이 탑부터 15m 높이의 거대한 돌탑까지 크기가 가지가지다. 도저히 인간이 쌓은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아 어떤 도인이 공중부양을 해 돌탑을 쌓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 신기한 점은 돌탑이 손끝만 대도 넘어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아무리 강한 폭풍우가 닥쳐도 돌탑은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주변 나

무를 뿌리째 뽑아버린 태풍에도 답사의 돌탑은 그저 조금 흔들렸을 뿐 끄떡없었다고 한다.

생긴 모양부터 신비로운 일이 많았던 마이산 산행은 여기까지다. 아래로 내려가면 산행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남부주차장에 다다르게 된다. 신기함으로 가득했던 하루 산행을 되돌아본다. 무진장의 보배창고 마이산에는 참 볼 것이 무진장 많았다는 결론이다.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기차는 용산에서 전주역까지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이용한다. 전주역에서 진안행 버스를 갈아타면 된다.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에서 진안시외버스터미널까지 직행하는 버스도 있다. 진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마이산행 버스를 타면 된다.



경부고속도로(서울) → 호남고속도로 → 익산JC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진안JC → 진안로터리 → 마이산도립공원 도착

섬세한 동사 사용이 좋은 문장을 만든다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언제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언어다.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바뀌고 환경에 따라 맥락이 달라지면 사용하는 언어 역시 그에 걸맞은 모습으로 바뀐다. 이런 정도는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리라.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상만사가 대부분 그러하지만, 안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않던가.

우리말이 민족의 얼을 담아서 변화하고 발달해 오기는 했지만 다른 언어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도 사실이다. 국어사의 큰 사건 몇 가지만 들어보자. 고려시대에는 몽골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조선시대에는 한문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언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의 영향을 받았다. 해방 이후에는 남한이 영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 국어사전을 들추어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영향은 지금도 우리 언어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언어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모범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학교나 사회 집단, 친구 등 다양한 곳을 통해서 확장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것은 언론 및 방송매체일 것이다. 특히 언론은 우리말을 가장 모범적으로 구사하는 집단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언론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언어생활을 돌아보기도 하고 바꾸어 가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방송을 보다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발견했다. 우

선 두 가지 예를 들어본다.

(가)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나)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방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
니다.

가결(可決)/부결(否決)은 ‘하다’와 만나면 타동사, ‘되다’와 만나면 자동사로 쓰인다. (가)와 같이 ‘가결시켰다’는 말 역시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면 국회가 자기 힘으로 법안을 통과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남의 힘에 의해서 통과시켰다는 뜻이 된다. ‘시키다’라는 말 자체에 이미 남의 힘에 밀려서 했다는 뜻이 들어 있다.

(나)는 일기예보 방송에서 흔히 사용하는 문장이다. 호우주의보는 기상청에서 ‘내리는’ 것이지 기상청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혹은 누군가를 시켜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더 말하면, ‘내린다’라는 말은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기상청이 국민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내린다’는 말보다는 ‘발표하다’ 혹은 ‘알리다’ 정도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다. 위의 문장을 고친다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가-1)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나-1)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방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했
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스며들어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 작은 단어지만 섬세하게 구분해서 쓰는 버릇을 들이면 우리 생각과 행동에도 높은 품격이 깃들 것이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회 ART GALLERY 8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Harmony

2023. 8. 1. - 8. 14.

작가 : 송유주 | 추천 : 배현진 의원실



2000년의 보물, 의림지

2023. 8. 16. - 8. 30.

작가 : 조미경 외 15명 | 추천 : 엄태영 의원실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7월 3일	•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내년 4월 총선을 헌법 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혀
7월 4일	•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제헌절부터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혀
7월 5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내용의 발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강력한 저지 입장을 밝혀
7월 9일	• 국민의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 내년 총선 전 ‘사업 적합성 재검증 뒤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7월 10일	• 7월 임시국회 시작 • 검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자금의 경로 추적을 위해 국회사무처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실시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
7월 11일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7월 12일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
7월 13일	•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 •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7월 말까지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달라’고 당부
7월 16일	• 김진표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간담회를 열고 “제헌국회와 제헌국회의원의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겠다”고 밝혀 • 여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 신속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을 한목소리로 강조
7월 17일	•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7월 18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의연금 각출의 건’ 및 영아살해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등 55건 안건 처리 • 김진표 국회의장,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재난의 원인과 관리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재해 예방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문
7월 19일	• 홍준표 대구시장, ‘수해 골프’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
7월 20일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거액의 가상 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
7월 21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7월 23일	• 여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권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혀
7월 25일	• 헌법재판소,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여야 이견에 채택 무산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을 보유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

정리 윤성혜

신속한 의정 현장보도와 정책이슈 심층분석

NO.1 정치 뉴스

국회라이브1

월~금 낮 1시 / 생방송

앵커 **송경철**
(前 YTN 앵커실장)

아나운서
이예재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